

일상에 꽃 피는 인권

제1회 생활속의 인권찾기 시민창안 사례모음

2009. 12.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글순서

8

시민창안 으뜸상

김은영 탈의실이 없는 어린이 의류 매장

9

시민창안 버금상

강지애 노약자 배려석, 차별인가 구별인가?

서울 목동고 소수자인권탐구반

학교를 이웃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15

시민창안 장려상

임주희 치마 입는 게 잘못된가요?

박수산나 성(sex)은 사라지지 않는다

박수진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개선하자

20

시민창안 공모전 참가 글

고아라 MISSION : POSSIBLE

김수정 '여직원' (이란 말)의 필요성

김태진 대학생의 총장선출에 관하여 투표할 권리

남윤희 '키보드 살인'

류재필 멘토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박동현 경사 심한 에스컬레이트에서 치마 입은 여성의 심리적 압박

박소연 이혼녀에 대한 회사에서 처우 차별!

박옥규 인권문제는 교육과 언어로 풀어야

박지호 폐쇄적인 사법고시
 서지훈 점자 보도블럭, 장식용인가
 송혜민 노인요양원의 허와 실
 심재호 인권과 에티켓
 이건규 온라인 속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이다정 똑같은 외국인, 그러나 피부색으로 평가되어지는 그들의 가치
 이령 고등학교에서 성적 공개는 학생의 인권침해
 이슬이 “저 여자 한번 꼬셔볼까?”
 이왕미 어린이는 어른들의 멸시 대상?
 이하나 인권의 이름으로 보행권을 사수하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이현승 각 지자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후견인 공무원과+ 시민 듀엣묵음 아이디어 키우기
 장경국 혈액형별 성격분류를 통한 차별행위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개선안
 회식 문화 속 음주강권행위가 지닌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제언
 장혜진 그릇된 보도행태와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
 전은경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설치 사례 및 개선 방안
 전해성 중·고등학생의 두발은 누구 기준?
 정민호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강의실
 정유라 대학생들을 하면서 느끼는 인권침해사례
 정주영 신문 기사 중 여성만 성별 표기의 부당성

정창도 군 제대 후 복학을 위한 인권교육
 조수진 자그만하고 소박한 꿈
 조이화 “어머니, 우리는 관심 받는 것만큼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타 지역인?! 우리는 한국인!
 조혜진 나는 나답다
 최복순 아파트&빌라 內 주방 가스렌지 자리는 집주인 또는 주부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
 최현우 학생 개인 시험 점수 공개에 의한 인권 침해와 개선 방안
 최현정 대학 내 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권침해
 최희주 11번가 광고의 ‘살색’ 발언
 홍누리 우리에게 ‘이혼녀’란?
 황현 인터넷에서 과도하게 요구되는 주민등록번호

진진연 자녀의 인권
 안은례 학생의 인권
 김수정 왜 ‘여자’ 고등학교인가
 손형식 그냥 ‘배려석’이라고 하자
 서준호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을 원한다

인권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받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지닌 차이가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은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합니다.
굶주리고 헐벗지 않아야 하며, 배우고 노동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권은 소수 전문가들의 관심사이며
생활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많았기에
그렇게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인권의 생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활현장이 인권의 현장이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인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민들께서 직접 찾아낸 생활속의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은 생활속에 실천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울림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함께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생활속의 인권과제를 찾아내어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 담긴 시민창안과 제가 인권이 숨쉬는 세상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주말, 난 엄마와 함께 추석빔을 사러 범계역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에 갔다. 새 옷을 살 생각에 엄마가 여성 의류 매장을 오랜 시간 동안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았다.

엄마는 각 브랜드 매장이 배치되어 있는 조그만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보고, 살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사기로 마음먹으셨다. 그리고는 우리는 함께 어린이 의류 매장으로 올라갔다.

난 물 만난 고기 마냥 옷을 골라 보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브랜드가 탈의실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나마 있는 곳 중에도 문이 잠기지 않는 것도 있었다.

탈의실 대신 천막을 쳐준다 하지만, 아무리 천막이 앞을 가려준다 해도 옷이 정렬되어 있는 뒤에 있는 유리의 틈은 가려주지 못한다. 아무리 어린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천막을 치고 갈아입는 것은 기분이 언짢았다.

어른이나, 아이나 돈 내고 사는 옷인데, 한 번 맘 편히 입어보고 살 수 있으면, 좀 좋을까? 아직 어린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외부에 의해 완전히 막혀지지 않은 채로 옷을 갈아입는다면,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니 어른 의류 매장처럼, 우리 어린이 매장도 돈을 들여 탈의실을 설치하고, 문이 잠기지 않는 것은 수리를 의뢰하도록 하여, 불가피한 사건을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시청, 구청 등이 적극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 하여, 멀고 큰 것 까지 인권침해의 범위는 상당히 크다.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것도 인권침해라 여기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우리의 인권은 그 때쯤이야 지켜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언제까지나 작은 실천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불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례

사실 내가 지하철 문화를 접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년도 채 안된다. 대학 수업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나는 혈기왕성한 젊은 피가 아니다. 지하철 일반석이 꼭 차도 노약자석이 비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는데 노약자가 없어도 윤리의식 때문에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앉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어떤 날은 여전히 고심을 하면서 서서 가고 있는데 고등학생들로 보이는 아이들 3명이 탔다. 그 3명 또한 꼭 찬 일반석을 한번 훑어보고는 문 바로 옆에 있는 노약자석을 가리키면 자기들끼리 “앉아도 되냐, 노약자가 오면 비켜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노약자석인데 부끄럽다” 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그 중 가장 터프해 보이는 여학생이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다. 그러자 한 명은 따라 앉고 한 명은 여전히 서서 가는 것이다. 나는 용기 있는(?) 학생들이 부럽기도 하면서 여전히 서서 가고 있는 아이의 심정에 공감하며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린 적이 있었다.

윤리적 교육과 인식을 중요시하는 문화 때문에 초·중학교 때까지 우리는 필수 과목으로 도덕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인권존중에 대해 개개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보고 깊이 있게 토론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대중교통 이용 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것은 배려라는 이름의 문화라기보다는 당연시되는 법 같은 인식이 강하다. 물론 허리 굽은 할머니를 보거나 백발에 중절모 쓰신 할아버지를 보면 우리는 생각이 거치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문제는 ‘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거나 자리가 비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권리인지 눈치 보게끔 만드는 사회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왔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개선방안

- 일단 우선적으로 ‘노약자석’이라는 명칭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저 자리는 노약자만 앉아야 되는구나.”하고 생각하게 된다. 차라리 명칭을 없애버리는 건 어떨까.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명칭 없애기 운동을 알린다.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 다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런 운동이 추진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대신 눈치 보는 자리 비워놓기가 아닌 마음에서 우리나는 자리 양보문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자. 우리 모두는 예전에 그 자리가 노약자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문구가 없어진다면 눈치를 보지 않으며 앉아갈 수 있고 노약자가 타면 또한 당연한 마음으로 비켜 줄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된다.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는 의미로 굳이 명칭을 바꾼다면 ‘노약자 우선석(잠시 앉았다 양보하세요)’도 괜찮을 듯 하고 ‘이 자리 주인은 그때그때 달라요~♪’ 등의 깜찍한 문구도 딱딱한 분위기를 깨고 친근한 지하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듯도 하다.

-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획일적인 윤리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도덕 수업은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교감이 아니라 획일적인 문구를 내세우고 고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서 교사나 부모는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또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교사가 “왜 우리는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식으로 물어보고 -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 거짓말 하는 개인의 도덕성을 들먹이며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다면 그 원인과 도출된 결과를 상상해보고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함을 이야기 하고 싶다.

과연 획일적인 사고 내에서 어떻게 “선생님, 노약자석 불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물음을 던진 이가 당연히 노인공경을 실천하며 살아왔고 아주 좋은 취지로 말했다하더라도 일단 그 짧은 물음을 듣고 난 후의 교사의 표정이라든가 주위의 매정한 눈길이 가히 상상이 간다. 질문하는 연습이 부족해지고 점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는 식의 걸러 가는 습관은 눈치 보는 사

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양상이다.

대학 강좌나 TV 토론에서 전문인들이 수업 듣는 학생들이나 시청자들과 직간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많은 질문이나 토론거리들을 이끌어냄으로써 소수가 말하는 소수를 위한 배려나 소수가 말하는 다수의 인권침해 등과 같은 여러 상황의 조율을 담당시켜도 좋을 것이다.

‘젊은 영혼이여 좌절하지 말 지어다’ 대화와 토론의 교육방식이 활성화 되면 대부분 주제는 ‘인간, 인간을 둘러싼 사회, 문화, 환경’이 될 것인데 그 속에서 인간의 권리는 아마 큰 부분을 차지하리라 본다. 교사나 부모가 제시하는 답변이 항상 정답일 리가 없고 듣는 이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고 많이 토론해봄으로써 적절한 선택에 대해 고민해보고, 삶의 질을 바꿔나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개개인이 모여서 한 나라의 질을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개인의 바람이기도 하면서 범국민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 운동장 조회 때 무조건적인 국기에 대한 맹세 의식은 복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권침해 → 없어야함
- 저소득층 지원 혜택을 받기위해 내야하는 개인적인 자료들이 너무 많고 학교 선생님들까지 자세히 살피는 것은 인권침해 → 자료요구 간소화 혹은 동사무소에서 학교로 상급학교 진학, 진급 시에 조기에 알려주어야 함
- 영어위주 외국어 정책과 수업은 다문화에 대한 차별 → 외국어 교육의 다양성 실현
- 명찰에 의해 학년을 구분하는 것은 차별(학생들이 상급학년이라고 해서 후배들을 무시하거나 피해사례 등이 많음) → 명찰이 필요하다면 같은 색, 같은 틀로 만듦
- 학교 용의 복장 기준의 인권침해 → 교사에 대한 인권강의가 필요함
- 외국인 학교를 특별히 만들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 외국인을 입학시켜서 함께 공부하게 하는 것이 다문화시대에 바른 외국인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함
- 수련회 시설에서 청소년 지도사들이 개인 사물을 검사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 → 계도가 필요함
- 학교 수준별 수업은 인권침해 →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으므로 검토 필요함
- 초등학교에서 인기투표 하는 것은 인권 침해 → 폐지 권고
- 학교 원어민 교사 채용 시 - 피부색 혹은 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함
- 여자화장실 앞의 그림표시 - 치마 → 바지도 가능함 → 시정

장애인

- 청각장애인의 생활불편 - 주택, 아파트 초인종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벨을 누르면 불이 반짝거리게 함

- 적·녹 색맹인 - 자동차 신호등 - 색과 함께 그림을 함께 표시해서 보행자 신호처럼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대중교통수단의 노약자석 표시는 오히려 그들의 권리 보호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계몽의 효과를 충분히 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좋음
- pc 방에 장애인용 컴퓨터 보급 일정 비율 의무화
- 공공장소에 있는 시계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보를 알려줌.
- 장애인을 위한 보험이 없음 →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이 없다는 것은 모순
- 영화관 좌석을 올라갈 때 계단식은 휠체어 장애인이 올라 갈 수 없음
- 장애인 택시에 장애인 표시 → 불필요함 → 삭제
- 신호등 시간이 노약자에게 너무 부족함 → 보행자 중심으로 신호등 체계를 바꿈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등 소리 '삐리리' 갑자기 끝남 → 숫자로 5, 4, 3, 2, 1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편리

기타

- 아파트 주민들의 옥상 공간 활용 → 폐쇄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홍보하고 공원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줌
- 비상구 표시등에 남자 그림 → 성별 차별 → 폐지하거나 성별 구분 없는 표시 → 남녀평등
- 왼손잡이는 문을 여닫을 때 불편함
- 왼손잡이에게 왼쪽으로 여는 공책은 차별 → 오른쪽으로 여는 공책이 필요함 (필기가 자유로움)
- 왼손잡이에게 왼쪽 마우스가 없는 것은 차별 → 왼손잡이용 마우스가 필요함 (학교 등에 보급해야함)
- 임대아파트는 빈곤한 이들에 대한 다른 차별 → 일정한 곳에 따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 고르게 분양되어야 함
- '서민'이라는 용어는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됨 → 언론 매체에서 사용 자제 요구해야함



- '여자 경찰' → 경찰
- '불 보이' → 여성들의 경우 표현 하는 말이 없고
→ 직업에서의 차별적 용어 이므로 시정
- 비행기 탑승 수속 시 공개적인 물품 조사는 인권침해 →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색 보완 필요
- kt 광고에서 '올레' 라고 외치며 선녀들이 옷 벗고 목욕하는 장면에서 감탄사를 외침 → 여성차별 → 광고시정 요구해야함
-
- 연예의 인권 침해 → 빈소 혹은 병원에서 → 기자들의 빈소출입, 병실출입을 일정시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버스 기본료를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가 없는 것은 차별임. → 구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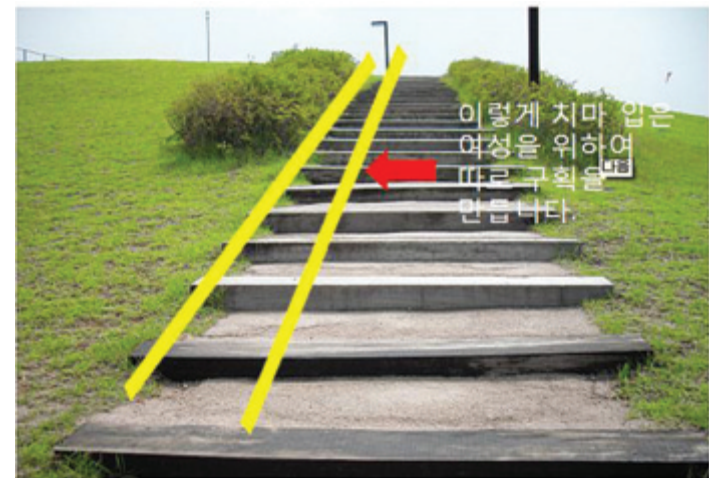
4 치마 입는 게 잘못된가요?

임주희

계단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사이로 속옷이 보이거나 속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치마 입은 여성들을 나무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잘못을 치마 입은 여성들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치마는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자신들만의 표현 수단입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속살이나 혹은 속옷을 보입니다. 때론 자신이 노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장소에 있는 계단의 한 쪽 부분을 칸막이를 설치하여 치마 입은 여성들만 다닐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럼으로써 여성들은 남의 주위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치마를 입고도 계단으로 이동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칸막이가 미관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 외관에 일치하는 색상과 재질을 이용하여 평균 여성허리 길이 까지 설치한다면 오히려 한 건물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계단에는 그래피티로 치장된 칸막이를 선보인다면 미적인 감각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학교 동아리에서 노인 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마침, 그날이 2층의 할머니들이 목욕하시는 날이었다. 2층의 할머니들은 대부분 치매, 중풍 때문에 외상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목욕을 위해서는 할머니 한 분, 한분을 안고 목욕탕으로 옮기거나, 휠체어를 이용해야 한다. 나도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할머니들 방에 찾아가서 휠체어로 옮겨드리고, 목욕탕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목욕탕에 도착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나에게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여자 목욕탕에 남자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남자 직원들은 할머니들이 옷을 벗으시고 목욕을 기다리시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다.

여자 목욕탕에 갑자기 남자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은 핫이슈다. 당연히 모든 여성들이 분노해야 할 일이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여자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왜 남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할머니들이 무거워서 여자인력으로는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남자들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자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의 나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본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면, 이 문제에는 할머니들의 감정을 배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르신

(특히, 할머니)들은 성적욕망,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못할까? 그렇지 않다. 어르신도 인간이다. 그리고 할머니들은 여자다. 성적 수치심과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인간인 것이다. 할머니들이 몸이 불편하여 표현만 못할 뿐이지, 이 상황(목욕탕)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등을 느낄 수 있다. 현재 남자인력이 할머니들을 나체상태로 옮겨드리고 목욕탕



안에 있다는 건 분명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상이고,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목욕인력수를 더 늘리는 것이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인력을 더 늘려서 기존의 남성들이 했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력을 더 늘리면, 힘을 분배할 수 있어 여성으로도 충분히 목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 어르신들의 방에서 목욕탕 앞까지 남성들이 일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을 목욕탕 내에서 옷을 입히고, 문 밖에서 곧바로 남성들이 방까지 모셔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르신들의 성적 수치심, 모욕감이 사라질 것이고, 여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문제 제기]

- 장애인 화장실의 존재는 장애인들과 일반인들 간에 심리적 거리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남·여 화장실 구분 설치 규정이 애매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공공시설에 남녀 공용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장애인 남녀 공용 화장실은 여성 장애인에게 심리적 불쾌감을 주는 공간이다.
- 공공기관 및 일부 상업시설을 건설할 시에만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일반인처럼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

- 현재 화장실 칸막이 하나를 없애서 두 개의 공간(변기가 있는 곳)을 하나로 바꾸는 것이다.

- 화장실의 입구를 하나의 휠체어와 한 사람이 동시에 지나다닐 수 있는 폭으로 바꾼다.

[대안의 현실성]

- 따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에 제시된 대안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회적 파급력]

-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덜 불편해지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전보다 사회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애인들이 그들의 사회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장애인과 일반인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해소될 수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쥐도 굴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다. 남들이 보기에 약하고, 힘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성질을 내거나, 반항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사람들에게, 힘없는 지렁이, 쥐이기를 바란다. 이윤 추구가 극대화되는 현실 속에서 자연이나 인권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문제는 뒤로 내버려 둔 채, 앞으로 향해 달려, 과학의 발달이 가져다 줄 편의성에만 집중한다. 따뜻한 정(情)이 아닌 과학이 선물한 차가운 기계의 발달은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감정을 메마르게 한다.

인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진 것이다. 자신이 국가나 사회적으로 해가되는 일이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갖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되었다. 과거, ‘노예’라는 이름이 있었을 시절, 사람들의 끊임없는 욕심이 가져다 준, 시기와 약탈에 대한 기대감은, 한 인간에게는 금전적 소유의 증대를 가져왔지만, 다른 인간에게는, 남에게 굴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노동에 굴복하고, 자신을 마치 동물처럼 혹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이들에게 종속되어, 고통의 삶을 살아갔다. 그들의 삶은 어두웠고, 빛은 없었다.

현재, ‘노예’라는 것은 과거 속의 말일 뿐이다. 하지만, ‘노예’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고된 노동을 하던 사람의 의미라는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는 약자 자체를 노예처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남자와 여자는 각자 하는 일이 달라, 남자는 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본 적 있다. 결혼과 함께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고, 동시에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 일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일이 구분되지는 않았다. 단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던 맹목적인 유교 관습이,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는 존재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 관습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노예’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종속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과 다를 없다. 사회는 발전을 추구한다. 누구에게나 발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주어져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참여를 통해, 다수의 힘을 이끌어 내어 더 나은 가치를 위한 창출에 힘쓰자고 사회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지만, 그들에게 참여는 남자와 다르게 취급받고 있다. 여자와 남자는 분명히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해 서로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때로는 직장에서, 다름은 ‘틀림’을 의미하기도 한다. 직장이라는 한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여자와 남자간의 틀림을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그래서 여자들은 유리로 가로막힌 하늘을 보는 경우가 많다. 더 많이 발전 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미래를 투명한 유리를 통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유리라는 ‘벽’을 뚫고 한 단계 더 올라 갈 수는 없다. 이는, 발전하는 사회와 달리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발전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행동이다. 더 좋은 것을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서, ‘틀림’에서 비롯되는 생각과 같은 관습은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다.

얼마 전, 학교 내에 근로복지 장학생을 신청 받는 공지가 났었다. 그래서 나는 학교 수업에 방해 받지 않고도 충분히, 내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신청을 하러 갔었다. 하지만, 학생과에 가자마자, 담당자 분이 “또, 여자가 왔다.”는 말을 하셨다. 분명히 공지에는 본교에 다니는 재학생일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업무에 관한 것도 제대로 알고서 왔는데, 대뜸, 나한테 물으시는 첫 마디가 “여기서 뭐 하는 줄 알아요?”하고 물으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강의실 같은 곳의 스피커나 무거운 장비를 정리하고 옮기고, 처리하는 일로 알고 왔다.”고 하자, “그런 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셨다. 난 그 상황에서, 도저히 근로 복지 장학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신청 서류



만 받아 나왔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서류상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 된다고 쓰여 있었고, 나는 그 항목 때문에, 근로 복지 장학생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담당자들이 말했던, ‘이 일’이라는 것은 남자만이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일이 아니었다. 스피커나 큰 무대 장치들이 무겁고, 힘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누구나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나에게는, 아직도 남자와 여자 자체를 차별화 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특히, 사회인을 키우는 학교라는 곳에서, 그 상황을 내가 마주했다는 것이, 당황스러웠다.

내가 겪었던 사례처럼 사회에는 사소한 일상에서조차도, 자신의 인권을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으로 체류 하다 보니, 영업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 우리와 똑같이 태어났지만,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먼 타지까지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연민은커녕, 오히려 더 부러움을 대상으로 여기려고만 한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항상 내가 맞고, 틀릴 수는 없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그 이후에 발전이 와야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발전만 추구할 뿐, 다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것을 외면하고, 차별을 두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의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차피, 남이 아닌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필요 없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와 다른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불합리하게 대우 받는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없어 질 것이다. 발전하는 사회 속에, 조그만 의식 변화가 가져다 줄 효과는 절대 조그만 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존재가 외면 받고, 무시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 보다는, 그 문제성을 해결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고쳐야 할 것에 대한 마음만을 가지지만, 그 다음에는 마음이 실천으로, 실천이 습관화로 이어지다 보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사회가 말하는 발전과 다름의 의미는 지극히 교과서 적이다. ‘빠르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과, ‘이것과 저것은 다른 것이다.’라는 일종의 말로만 이해되는 말들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은, 교과서와 같이 책에서만 배운 대로 모든 길이 정해진 삶이 아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능력에 따라, 더 나은 삶, 조금 부족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똑같은 인간, 사람이라는 것이다. 똑같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더 못하다고 해서, 더 부족하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허락 될 수 없다.

사회가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었던 과거가 있었다. 그 과거는 남에게 베풀고 친절하고, 정 많은 사회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를 외치며 이루어 낸 성과에 자아도취 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뿐이다. 경쟁사회이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선 남이 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쟁사회를 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사람이다. 사회라는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적응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때, 우리 조상들이 물려 준 ‘예’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모습은 어떠할까?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기 보다는, 내가 좀 더 나으니, 앞서가는 입장에서 남의 의견도 수렴하고, 함께 도움을 주며, 공동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사회에 더 좋은 발전의 씨앗이 될 것이다.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가 아름답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렇다면, 그 이상향을 위해, 노력하는 게 사람들의 몫이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임무가 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사회’ 같은 이상향을 그저 교과서에만 바라보는 단지, 꿈일 뿐인 말들로만 남기기보다는, 그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여,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에게 몸소 우리가 보여 줘야 한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더 좋은 삶을 위해……. 사소하게 느껴지는 인권이, 이제는 존엄성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도 소중하다는 의미의 단어로 뒷받침되어, 모두에게 필수적인 가치로 느껴질 인권을 위해, 우리가 사회는 변화 시키는 것은, 그리 힘든 미션이 아니다. 이제, 사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미션을, 수행할 때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일 년 계약으로 성서공단의 한 컨설팅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일반 파워포인트 작업을 포함한 회사 내 청소, 화장실 청소, 커피접대, 그 외의 모든 잡다한 일이다. 정리하자면 청소를 기본으로 해서 뚜렷한 업무의 선이 없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들은 말은 ‘여직원’ 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난 그냥 직원이 아니라 ‘여직원’ 으로 채용된 것 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여직원’ 이라는 말을 듣는다.

“야, 넌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네가 뭐데 꼬박꼬박 말대꾸야. 여직원이면 여직원답게 있어!”

“이런 걸 뭘 직접 하십니까. 이런 건 여직원 시키십시오.”

“여직원들 교육 좀 시켜야겠습니다.”

“여직원이 어디서. 말하는 꼬라지 하고는.”

위의 문장들은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 처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 분명하게 ‘여직원’ 이라는 단어에 엑센트가 들어간 문장들이다. 그리고 ‘여직원’ 이라는 말을 ‘직원’ 이나 인명으로 대체시켜도 무방한 문장들이다. 왜 굳이 ‘여직원’ 을 넣는 걸까. 대체, 여직원이란 뭘까. 그게 무엇이길래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걸까. 그는 나를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필경 하인이나 종 따위로 보는 듯하다. 회사에서 통용되는 여직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다수의 대답은 ‘경리직 업무를 담당하는 여자’ 를 의미한다 했다. 경리직 업무를 담당하는 남자를 의미한다는 사람은 없었다. 경리직에 남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보통 큰 기업이라 한다. 즉, 보통 경리라 하면 여자를 떠올릴 만큼 경리직은 대다수가 여자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 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구인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경리사무직이며, 여자를 채용한다는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남자들이 지원서를 넣었다. 하지만 모두 “이건 필요 없다. 갖다버려.”란 결과였다.

왜 경리직에 남자를 채용하려하질 않는 걸까. 자격증도 화려한 그들에겐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경리란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여자를 채용한다 했는데도 지원서를 넣은 남자들을 바보라 욕까지 했다. 그들은 진심으로 일이 필요했을 테고 이 일이 자신과 맞을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랬을 지도 모른다. 왜 그들은 남자란 이유만으로 경리에 고용될 수 없는 걸까.

혹시 이것이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이미지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집에서 아내 보며 살림이나 하는 순종적 여성의 이미지와 일반적 경리업무의 이미지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남성을 결부시키길 그렇게도 거부했던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같은 성별을 가진 남성으로서 커피접대에 걸레질하는 남자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그래서 경리직에 남자보다 여자가 우선채용 되는 것이 라면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자로 있던 남성들의 잘못된 관념이며 너무나 시대역행적 이다.

다수의 고용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자격증이 많고 사무직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사정이 있는 남성이라도 지원서를 넣어봤자다. 고용주는 여성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는 아무리 여성인권을 외쳐도 절대 요지부동일 여성에 대한 절대적 시각을 만들어내는 양산소가 된다. 회사의 남성들은 집에서도 걸레질하는 여성, 밖에서도 걸레질 하는 여성을 볼 것이다. 이런 이미지의 반복적 섭취는 무의식중의 학습효과를 자아내 여성은 걸레질하는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인식해 버릴 것이다. 이것이 그가 나에게 그렇게도 당당히 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그의 머릿속에는 수 십 년 동안 회사에서 본, 청소하고 시중이나 드는 여직원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이다. 이 인식은 대기업을 제외한 다수기업의 남성들이 갖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이것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바뀌기 힘들다본다.

경리직에 남자라는 경쟁상대가 더 생기는 것에 못마땅할 여성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안 그래도 부족한 여성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도, 남성도 경리직을 할 수 있는 채용의 평등을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함께하는 기관으로서 초등·중등·고등교육으로 나누어 볼 때 최고의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흔히들 대학하면 지성의 요람, 낭만과 꿈이 있는 곳을 떠올리며 무엇보다도 자유스러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이란 곳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자유스러움이기 때문이다. 수업선택부터 해서 수업포기까지 많은 자유가 주어지며, 짜여진 시간표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결정해야만 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즉, 대학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대학은 자유와 낭만을 마음껏 즐기거나,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할 의무가 그리고 학생은 수업을 들을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는 단순히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지식만을 습득하는 곳이 아닌 자신을 수양하는 장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학진학률은 84%로 단연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권리란 또는

인권이란 그저 사전적 의미에 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특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학생은 인권활동을 가장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권리를 찾기 위해 1988년 민주화의 결실로 도입된 총장직선제에서 총장선출에 관한 투표권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학생은 교수와 교직원 등과 함께 대학을 구성하는 3주체 중 하나이지만 국내 대학의 총장선거에서 학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간혹 총장추천위원회 등에 극소수의 학생대표가 참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측의 그림은 우리나라 대학의 총장직선제 절차입니다.

총장직선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문제점을 더 많이 드러냈죠.

총장 선거로 인해 지연·학연으로 얽힌 교수들 간 이합집산이 일상화되었고 접대가 난무하면서 교수들은 학생은 뒷전에 두고 선거판에만 관심을 두고, 총장 선거를 전후해 난무한 투서와 진정, 비방이 계속되면서 사태는 좀처럼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교수와 교직원 등 교내 인적조직은 두 동강 난 채 끝없는 감점싸움을 벌이며 대학 발전을 저해 하고 있다는 게 현직 대학 교수들의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치판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런 대학 발전을 폐해를 막기 위해 현재 연세대, 조선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총장직선제와 각 대학 특성과 실정에 맞게 직선제를 포함한 다양한 총장 선임제도를 활용해야한다 또는 지역대표와 동창회, 교수회 임원들로 구성된 총장선임위원회를 만들어 선출하자는 등 여러 가지 대안들... 허나 이것은 누구를 위한 선거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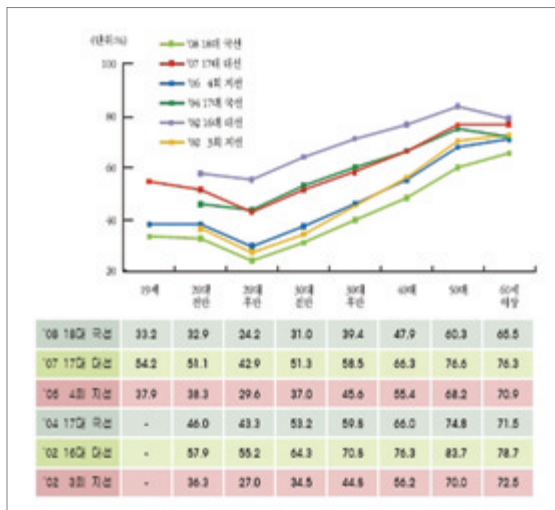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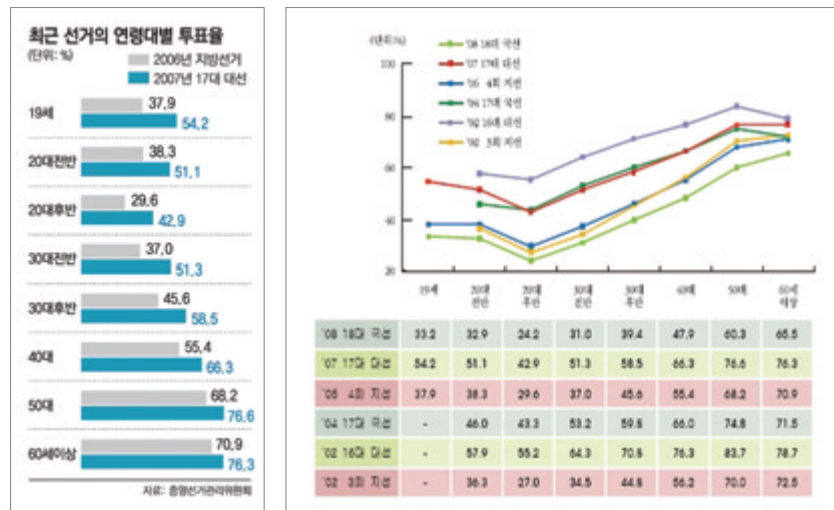
대학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대학생은 헌법에 보장 받는 참정권은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학생은 국가원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고,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뽑는 등 국민이 직접·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투표할 권리를 가진 존재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학생들에게 총장선출에 관한 투표권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정치에 무관심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17대 대선 때 20대 후반의 연령대에서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개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갖는 영향력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현재 대학생 개개인이 가진 선거 투표권이나, 정치적 발언이나 집회 등등의 활동이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력'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대란 등등으로 가치관 자체가 개인적이고 현실 지향적으로 바뀌어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뽑아도 내 생활이 바뀌는 것은 없어,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의 정치참여도는 오히려 20대의 투표율보다 높습니다. 하지만대학생의 신분이라도 할 수 있는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사이의 투



표율은 변함없이 가장 낮습니다.

왜 참정권에 기반 투표할 권리가 대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것일까요?

참정권을 얻는다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신이나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주권재민 사상)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 몇 백 년 전만해도 국가의 주권은 일부 소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의 경우만 봐도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되는 1920년에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즉, 참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성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를 제약할 수 있는 개인이나 사회, 국가 기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투표를 하던 안 하던 그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잘못된 지도자가 뽑혔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인 나 또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왜 학생이 주인이 대학교 내에서 총장선출에 관하여 참여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2009년 9월 19일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법무부가 18일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후견인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은 물론 매매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만19세라면 이제 대학교 1학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19세가 되면 후견인 혹은 법정대리인 없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받는 나이인데 왜 총장선출에 관한 투표권은 없는 것일까요?

국민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내는 돈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기 위하여 내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물질적으로 정부라는 메신저를 통해 도움을 주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영위하도록 도와 줌으로써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표 중에 대표인 대통령을 뽑는데 국민이 투표를 하고, 그 국가원수와 함께 이끌어갈 국회의원들을 뽑는데 투표를 하죠.

우리는 등록금을 냅니다. 어림잡아 인문계열 300만 원 이상 자연계열 400만 원 이상 1년에 2번!! 4년이면 인문계열 2400만원 자연계열 3200만원을 냅니다. 하지만 우린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가요? 상습적인 난투극을 벌이는 정치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기득권층은 비 기득권층을 억누르려 고만하고, 겉으로는 이름 좋게



사탕발림을 아끼지 않지만 자신들의 실속만 챙기는 정치인들과 대학을 이끌어가는 총장 및 교수님 분들...

대학발전을 위해서가,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

하는 대학본부에 대학생들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 인생에 점점 찌들어 갈 것입니다.

2001년 11월 26일 김대중 대통령임기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연구를 위해 각 지역별 인권중심대학을 선정하여 2007년 공모인이 재학 중인 영남대학교가 전남대에 이거 2번째로 인권중심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거창한 간판을 단 셈이겠습니다. 인권중심대학에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 아닐까요?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고, 학생들이 있으니 학교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것 아닐까요? 몸담고 있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기 전에 학생들의 위해 무언가 한다면 자연스레 학교의 명예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싶은 것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지나가고 정보화 시대가 판치고 있는 요즘 우리는 컴퓨터라는 매개체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만큼 인권문제도 변해가고 있다. 컴퓨터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정보화인권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 생활 속에서 익명성을 무기삼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무시한 채 비방과 욕설이 넘치는 글을 쓴다. 상대방이 받을 충격과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말이다. 정보화 시대가 발전이 되갈수록 '악플' 문화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더 치밀하고 세분화 되어지는 느낌이 든다.

‘악플러가 죽었다’ 유니 자살 네티즌 자성 목소리

일간스포츠 -2007.01.21-

최진실 ‘자살’에 루머, 악플 ‘대두’ ... 네티즌 ‘자성’ 촉구

디시뉴스 -2008.10.08-

연예인들도 하나의 인권을 가진 사람이다 연예인이란 이유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악플이 달려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런 정보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악플 퇴치문화에 대한 교육을 나라에서 무료로 강의하게 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인식을 키워줘야 할 것이고 악플 보다는 그 사람의 문제점을 적어 고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글을 남기는 운동을 인터넷상에서 펼쳤으면 한다. 악플을 습관적으로나 재미로 자주 남기는 IP 등을 조사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면 악플 문화는 사라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은 누구나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만큼 이런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정보화 시대를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세운 거나 다름이 없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든 인생이든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특히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친구들과 사귀는 것까지도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마음에 섭섭함과 실망이 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쳤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아픈 마음을 다스리고 달래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적과 인격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성적과 인격이 반드시 일치 않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대학 내에서는 오랫동안 학생을 구분해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대학 신입생의 멘토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성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볍지 않은 문제 제기로 그런 기준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입생의 멘토가 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적순 학점순의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적만 따지는 대학 풍토는 여전히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성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고 차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학점이 3.5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신입생을 위한 멘토를 모집하면서 지나치게 편협일률적으로 성적만으로 멘토 선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멘토로 지원한 학생이 멘토에 임하는 자세나 그와 해당되는 노력이나 준비를 하는 태도보다도 단순한 평점이나 토익성적만으로 멘토를 선발하는 것이 사람을 뼈뼋하게 보는 시각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대학 내 편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멘토는 무조건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고정 관념입니다.



멘토를 지원하는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안겨준 것입니다. 보다 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사람을 뵈는다면 대학에서 사회경험을 많이 쌓고 다양한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불어 사는 삶이고 진정한 멘토는 함께 성장해가는 친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신입생 멘티와 함께하는 멘토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재다능한 사람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인지 멘티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과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기준을 무차별로 유포하여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고학점 고득점 토익 점수를 모범적인 학생으로 대우해주고 이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멘토 선발의 기준. 바로 그것이 제가 멘토를 지원하면서 보고 느낀 우리 대학 내의 인권차별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 주변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상도 많이 타는 '엄친아' 처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특정한 점수를 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 성적으로 순위를 매기고 사람의 됴됨이까지 전부 판단해버리는 것이 당연한 현상처럼 인식되고 그것은 사회적 차별로 굳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침묵한다고 해서 나까지 침묵한다는 건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이끌려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배 멘토가 후배 멘티에게 해주는 일은 크게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도록 해주고 처음 접하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학점이 3.5가 넘지 않는다고 이러한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나 부족하다는 근거 또한 없습니다.

비록 남들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도 훌륭하지만 한번쯤은 진지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성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합한 기준이 아닙니다. 학점과 토익만 앞세워 우수한 학생을 능력 있는 멘토를 성적으로만 사람을 미리 판별해버리는 관행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높은 낮은 성적은 학점은 멘토를 판별하는 절대적인 잣대

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란히 경쟁하면서 서로의 경험과 다양하고 멋진 패기를 배우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열린 대학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쟁과 스펙의 논리가 취업곳곳을 휩쓸고 있는 세상이지만 한창 자유롭게 마음껏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어야 할 청년들이 성적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잘라내는 것은 꼼꼼히 되짚어 봐야할 점입니다. 대학 안에서 마음속의 지인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디딤돌이 되도록 작지만 소중한 힘을 보태야 합니다.

대학 내에서도 존중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웬만한 외부 비판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건방지고 오만한 학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은 권리를 되찾고 올바르게 행사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교수와 학생 그리고 대학이 서로 충분히 교류하면서 학생은 나이, 성별, 학교 성적으로 등 어떠한 기준으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 제시 및 문제제기]

지난 9월에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전동차 내 손잡이가 기존 노선의 전동차보다 낮게 설치되는 등 시설 면에서 승객의 입장을 고려해 많이 편리해지고 안전성을 확보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역의 경우 에스컬레이트 경사가 너무 급해 갑작스런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더욱이 경사가 심한 경우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난처해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사례로 제시코자하는 곳은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이곳 역에 설치된 환승 에스컬레이트는 길이가 서울 지하철 중 가장 길고, 계다가 좁은 공간에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하다보니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오름 에스컬레이트의 경우 치마를 입은 여성은 뒤에 승객이 있을 경우, 특히 남성이 뒤따를 경우 기다렸다 타기 일쑤입니다.

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나 어린 여학생들의 경우 매우 당황합니다.

반면 이곳 에스컬레이트를 탄 남성의 입장에서는 치마 입은 여성이 앞에 탔을 경우 위로 쳐다보기가 민망합니다.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의 경우 등에 짙어진 가방 끈을 축 내려 엉덩이 치마를 가리고 다닙니다.

이곳 당산역은 경사가 워낙 심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사가 급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트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을 자주 목격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이러한 급경사 계단은 특히 에스컬레이트의 경우 운행하다 정지한다든지 역주행할 경우 엄청난 인명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이에 치마 입은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해 에스컬레이트 설치 시 급경사를 제한하

였으면 합니다. 경사도에 관해서는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에스컬레이트뿐만 아니라 일반 계단을 설치할 때도 지나친 급경사 계단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면 합니다.

이는 여성의 인권과 관련짓지 않더라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급경사 에스컬레이트의 경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위해 간단하게 입을 수 있도록 짝퉁이를 부착한 앞치마를 비치해 치마를 가리고 오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당산역의 경우처럼 오름 에스컬레이트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경우 한쪽은 남성용, 한쪽은 여성용으로 구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 입니다.

[사회적 파급력]

이처럼 경사심한 에스컬레이트는 서울뿐만 아니라 주요도심 설치 공간이 좁은 지하철, 육교 계단, 또 산마루 계단 등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는데, 차후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용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경사를 완화해 다른 묘안을 발굴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설치된 곳은 상기 대안이나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계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거나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짧은 치마를 입는 여성에게 긴치마나 바지를 입으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옷은 날개인 만큼 특히 여성의 경우 의복만큼은 크게 반사회적 도덕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에스컬레이트 경사 완화는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치마를 입은 여성들에게 보다 자유로움을 주고 심리적 압박과 긴장을 완화시켜 오히려 행복한 이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웃소싱업체에서 제 동료인 이혼녀 여자에 대한 회사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나이가 많거나, 주부이고, 이혼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40대 이혼녀 여직원은 다른 곳에 마땅히 취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 저희 회사 사장이 지시한 것은 무조건 따랐습니다. 초과 근무는 물론, 야간업무는 수없이 했고, 초과근무 수당 및 연차/월차 수당 전혀 없이, 다른 남자직원과 경력으로 보나, 업무능력으로 보나 월등하지만, 급여에서 많은 차별대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회사를 그만둔 후 퇴직금을 주지 않아, 수십 번 부탁을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행하던 회사에 노동청에 퇴직금관련 고발을 하였더니, 협박 문자 및 사람을 써서 가만 안 둘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전하라고 하고, 실제 이리저리 그 사람의 뒤를 캐는 전화를 어떤 분이 받고 무서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 이혼녀가 그만둔 후 회사로부터 갖은 협박을 당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면서, 제가 물심양면으로 회사 사장 몰래 많이 도와주게 되면서 이런 인권유린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비윤리적인 기업인은 사업을 하면 안 되며, 사회에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및 사회적 파급력 등 설명

퇴직금과 연차, 월차 수당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해 노동청에 고발하면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청에 나와서 해명을 한 후, 지급을 최대 2~3개월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그걸 노리고, 양값음으로 바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법이 요구한 시간의 마지막 날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노동청에 고발하기 까지 몇 개월을 회사에 부탁하고 사정하고 심사숙고해서 하였는데, 막상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면담을 한 후 또 2~3개월 후에 돈이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부당하게 돈이 미지급된 것을 시급히 밝혀서 최대한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노동부 법을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고발을 자주당하는 회사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해서, 연간 몇 회 고발 시 사업자 등록증 취소 등 강력한 패널티 누진제를 적용하게 되면 사업주의 윤리의식에 경종을 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차 례 -

인권과 언어 / 인권문제와 그 대안 / 맺음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 성별, 민족, 종교, 언어, 견해 등에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인간은 인간다운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외적인 것과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것이 곧 인권이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다. 많은 사람들은 법과 제도, 전통이나 관습에 익숙해져 있다. 우선 불편하지 않거나 일면 타당성이 있는 인권문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간다. 우리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 인권의 척도는 소수자에 대한 다수의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인식과 존중의 태도에 따라 인권문제가 확연히 드러난다. 여기 본문에서는 대부분의 인권문제가 언어문제와 관련이 많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 본다.

인권과 언어

인종차별 철폐와 각 인종간의 공존을 위해 민권운동을 이끈 미국의 흑인 침례교 목사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은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였다. 그는 1963년 워싱턴에서 흑인들의 비폭력 투쟁운동으로 대규모 평화행진을 주도하는 등 전미 조직을 통해 유명해졌다. 1950년대 중반부터 인권운동을 전개해 온 그는 1968년 테네시Tennessee 멤피스Memphis에서 결국 암살당하고 말았다. 그의 인권운동은 높이 평가받아 1964년에는 노벨평화상이 수여되었다.

노예해방선언을 이끈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민권운동가이자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Nelson Rohihlahla Mandela, 미얀마의 민주화를 주도하고 제5회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여사, 우리나라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등이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소외받고 외면당한 사람들, 약자나 서민층을 대변하며 인권신장에 힘을 쏟았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동티모르East Timor와 보스니아Bosnia 사태 등 종교 및 인종간의 갈등도 파고들면 대표적인 인권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미국 여기자 억류문제도 그렇다. 가깝게는 가족 간의 갈등문제, 어린이나 미성년자들에 대한 무관심, 학교에서의 왕따, 성폭력이나 언어폭력, 직장에서의 해고 등 인권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차츰 수면 위로 떠오르는 동성애자들이나 성전환자Transgender들의 인권문제는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동성애자 홍석천과 트랜스젠더 하리수 등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무관심이다. 시위 때마다 거론되는 시위자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쌍방간의 인권문제도 존중되어야 한다. 최근에 전문의와 상의하지 않고 정신병동에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당연히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판례도 나왔다. 그렇듯 지금은 복지문화시대요 인권문화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권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문제라 생각한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주는 상처나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는 평생을 두고 가슴에 남게 된다. 에마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란 책을 보면 수궁이 간다. 물에게 말을 걸었다. ‘너 정말 예뻐’ 했을 때는 눈썹의 예쁜 결정체가 나타났고, ‘망할 놈’이란 말을 했을 때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랑’과 ‘감사’라는 언어를 보여주었을 때 물은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나타났고, ‘악마’라는 언어를 보여주었을 때는 중앙의 시커먼 부분이 주변을 공격하는 듯한 형상을 보였다. 이런 언어적 표현의 실험은 말이 갖는 힘을 잘 보여준다. 사람에게서도 인격이나 인권을 무시하는 언어를 던졌을 때 받는 정신적 피해와 마음의 상처



가 어떠한 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지만 감정도 함께 실리게 된다. 그래서 화자는 청자의 입장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자칫 상대방의 인격이나 인권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인간의 사상이요 정신이며 화자의 인격이기에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랑과 희망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 칭찬과 격려는 장미꽃과 같아서 그것을 주는 사람의 손에도 향기의 일부가 남아있기 마련이다. 적절한 격려의 말이나 희망의 메시지는 힘들어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꿈을 키워주고 소망을 준다. 좋은 말과 긍정적인 말은 인생의 힘이 된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한번쯤은 기분 상한 말이나 욕설을 들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바보’, ‘등신等神’, ‘염병染病하네’, 그리고 ‘오살?殺×’, ‘육실戮屍형×’, ‘벼락맞아 죽을×’ 등 듣기에도 기분이 나쁘거나 섬뜩한 느낌이 오는 말이다. 이들은 욕설이 갖는 느낌이 있기에 기분을 망치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는 인간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와 같은 언어의 표현은 생각보다 오염이 심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도 11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도 12만 명이 넘는다. 특히 동남아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에 따른 제반 문제와 인권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부모와 아이들에 대한 인권문제다. 우리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과 정체성으로 배타성과 폐쇄성이 강하다. 인종적 우월감과 전통문화 의식의 자부심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내외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주 대상은 학교 친구이지만 학교 선생도 은연 중 편견을 갖고 있다. 친구들과로부터 욕설과 모욕, 헐뜯고 왕따, 신체적 폭행이나 성추행 등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다보니 전통문화의 가치 기반이 무너져가며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제는 지구촌 문화에 바탕을 두고 외모나 피부색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모든 인종을 포용해 나가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지구촌의 인권이 존중되는 더불어 사는 인간사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의 초기단계부터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다문화 가치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교육적 배려다. 이들은 외적인 것도 그렇지만 대개 학습능력과 언어능력 부족으로 학교 교과 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한국어가 미숙한 부모에 대해 자긍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자기정체성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취학 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과 후 교육에 한국어교육, 학습상담지도, 다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반 학생과 학부모, 기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인종과 언어 등 문화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눈높이 다문화교육도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과정에는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상담멘토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된다.

인권문제와 그 대안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보다 수준 높은 시민사회로 이끌어 올리는 일이다. 그것은 양질의 교육정책이다.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10년 이상 아니 한 세대 이상을 내다보아야 한다. 우리들의 차세대가 예외범절이 바르고 교육수준이 높은 선진국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언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권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며 해결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첫째, 어린 시절부터 윤리와 도덕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전통문화와 서구문화, 그리고 현대적 문화가치가 뒤섞여 인간 상호간의 믿음과 질서조차 무너져가고 있다. 사소한 일로 인권이 무시되고 귀중한 생명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다. 인격이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과 언어폭력은 당사자로 하여금 마음의 큰 상처를 입게 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인간사회가 수준 있는 언어사용, 상호간의 올바른 인사, 남을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공동체 의식 등 기본적인 인간자세가 갖춰져야 한다. 기초 질서 지키기나 준법정신, 공공질서, 이웃사랑의 실천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에 관한 법안이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글로벌시대의 교육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세계화시대의 지구촌 모든 인종에 대한 편견과 편협성은 사라져야 한다. 다른 나라의 인종과 언어, 전통과 문화 관습 등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 지금도 서구사회는 백인우월주의 사상이 강하다. 동양권인 우리도 한민족이라는 자의동일성과 독특한 한글문화와 머리가 우수하다는 자긍심이 강하다. 우리의 것만 그런 것이 아니다. 타민족의 인종과 언어와 문화도 그만큼 가치가 있고 존중되어야 한다. 나의 인격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인격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많이 찾고 있고 국제적 행사도 많이 치러지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친절감, 세계공용어 영어의 실용적 교육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인간의 기본 윤리나 인권문제를 다루는 교재개발이다.

옛날에는 『명심보감明心寶鑑』, 『동몽선습童蒙先習』, 『소학小學』 등의 교재로 인간의 기본교육이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현대는 그것이 부족하다. 따라서, 인간과 윤리, 인간과 언어, 인권과 사회, 인간과 복지사회, 인권과 민주시민, 글로벌 시대 다문화교육 등 여러 종류의 교재를 개발하여 장별로 나누어 종합적인 인간성 교육 곧 윤리교육과 언어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인권문제가 부각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넷째, 영향력이 큰 신문과 방송 등 대중매체의 언어정화와 심의 강화다.

신문이나 방송, 영화 등 대중매체의 언어는 정화되어야 한다. 이것의 영향력은 너무 크다. 드라마상의 ‘야, 이 자식아’, ‘환장하겠네’ ‘짐승남’ 등 다소 듣기 거북스러운 대화나 언어표현이 심심찮게 나온다. 정치권이나 유명 인사들의 막말이나 거친 표현도 그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조문객 숫자를 두고 ‘미쳐 돌아가도 너무 미쳐 돌아가고 있다’, ‘국민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서 복역하는 수밖에 없다.’ 등 컬럼 기고에 표현한 것도 일종의 인권 모독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가부장 중심제였다. 그러다보니, ‘여편네’, ‘집사람’, ‘시집간다’란 불평등의 언어가 많았다. 지금도 ‘S라인’, ‘꼬리친다’, ‘양갈지다’ 등 여성적인 특정 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다. 인격을 비하하거나 인권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다섯째, 인터넷상의 의견표현 사용에 실명화가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는 인터넷 시대다. 인터넷은 신분과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표현상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아니함은 물론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다. 인권의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로. 비방, 욕설, 유언비어, 음담패설 등이 인터넷상에 난무한다. 따라서 이런 언어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명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는 실명제란 용어에 낯설지 않다.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거래에서 일체의 가명이나 차명을 사용하지 않고 실명과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의무화한 제도로 정착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지 댓글을 다는 것에 실명제로 가야 한다. 물론 이에 따른 반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여전히 악의적인 글이나 비방이 판을 치고 말과 글을 통한 인권이 무시될 경우가 많다. 얼굴 보여줘<얼굴 까봐, 아까워<아까비, 안녕하세요<할롱 등 인터넷에 의한 한글의 파괴문제는 갈수록 심해진다. ‘×녀’, ‘개××’, ‘미친×’ 등 여러 종류의 욕설 사용도 별 거리낌 없이 사용된다. 대화방의 언어파괴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외국어도 Where is it(Warez, You too(U2로 쓸 정도다. 잘못된 언어사용의 수준이 도를 넘어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세살 때 배운 인터넷 예절 여든까지 간다.’는 경구가



필요하다. 실명제가 실시되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출처가 불확실한 자료 유포를 차단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댓글이나 댓글을 줄일 수 있다. 언어문제가 곧 인권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맺음말

언어학자들은 ‘한 가지 말을 1만 번 반복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독일의 철학자인 라이프니츠G.W.Leibniz는 ‘언어는 인간정신의 가장 좋은 반영’이라고 하였다.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말이다. 옛날 속담에도 ‘너의 혀바닥으로 너의 목을 자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경구가 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는 베를린 시청에 새겨진 문구도 있다.

하나의 사물이나 내용에 대해 모든 사람의 시각이나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다. 나와 다른 반대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인권이다. 인간생활은 언어 생활이다. 언어로 인간생활이 이루어진다. 본문에서는 인권을 언어문제에 국한하여 이야기하였지만 사실상 인간이 살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인권문제가 내재해 있다. 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표시에 비평이나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시되어선 안 된다. 교육의 초기단계부터 언어순화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인권문제도 신장된다고 본다.

인권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윤리와 도덕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언어순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강화는 물론 정보통신에 대한 윤리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글로벌시대의 교육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더불어 인간의 기본 윤리나 인권문제를 다루는 교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향력이 큰 신문과 방송 등 대중매체의 언어정화와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법의 제도적 정비와 인터넷상의 의견표현에 실명제 조기 도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언어를 구사하는 사용자가 의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15 폐쇄적인 사법고시

박지호

회계사 시험과 사법 고시에만 유독 전공 이수 과목 학점을 요구하면서 다른 과 전공 학생들의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변리사나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 자격시험에는 토익 제한만 있을 뿐 전공자만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변화사의 경우 사법 고시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서 2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면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변호사들이 변호 업무에만 열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변호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의 업무까지 병행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고, 마치 대한민국 최고의 특권처럼 법에 관련된 전문직 업무는 다 도맡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전문직을 따서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대한 변호사 협회의 입김은 그야말로 최강의 이익단체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고검장, 정계, 경제계에 막대하게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와 한의사회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후배 법학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을 만능으로 만들었으며, 공무원 시험에서도 일반직에서는 직렬에 관계없이 가산점 5점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 사라지는 사법시험이지만, 로스쿨은 그야말로 등록금 2~3억원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성공하려면 외무고시나 행정 고시 봐야 하는데, 학원비, 교재비, 과외비, 생활비가 만만하지 않죠. 7, 9급 공무원 공부나 토익, 토플, OPIC(영어말하기쓰기시험)까지 준비하려면 사교육비가 엄청 납니다.

서민은 대학 등록금 4000만원 대출받아서 인턴이나 영업직 외에는 일자리 없습니다. 60만원에서 관공서도 100만원 안팎의 6개월짜리 임시직입니다. 이런 젊은 이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까요? 자립형 사립고와 국제중 설립, 영어 유치원 등



으로 사교육비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능가하는데, 250만 명의 자발적 실업자들은 이미 구직 의지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3% 실업률은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실업자 수치일 뿐, 실제로 아르바이트나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프리터 족들에게는 일자리가 있다고 남들에게 얘기도 못합니다. 창피해서요. 비정규직 양산으로 청년들은 질 낮은 단순 노무직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토익 900 받아도 전화 받고, 복사하고, 커피 탑니다. 정말 비효율적인 고용 시장이라 생각합니다.

결론: 사법시험에서 관련 학과생만 응시할 수 있게 한 폐단을 없애야 합니다. 인권탄압 요소가 있고, 공평한 평등의 기회를 뺏는 겁니다. 물론, 새로 법대 진학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돈과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능력만 있으면, 공부 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돈에 얽매이고, 일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불공평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좌절하여, 반사회 세력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헌법의 행복 추구권을 훼손하는 법제도를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개요

I. 문제제기

II. 사례모음

1. 점자 보도블럭의 장식화에 대한 사례(사례1)
2. 보도블럭의 무분별한 교체(사례2, 3)
3. 기타 필자의 생활 속에서의 점자 보도블럭

III. 문제해결방안

IV. 나오며

I. 문제제기

- 신체적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스쳐가는 것들이다. 특히 우리가 친구와 가족과 연인들과 걸어 다니는 인도에서는 노란색 점자 보도블럭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다. 스쳐지나가며 생각하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설치했구나 좋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보도블럭은 그야말로 시각장애인들이 걸어 다니기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 방해물로 전락하고 있다. 점자 보도블럭이 이어지다가 중간에 끊어진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공책만한 점자 보도블럭 한 조각만 바다의 중간에 보이는 무인도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인도를 걸어 다니면서 연례행사처럼 정기적으로 인도의 블럭을 교체하

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블럭 교체는 무의미하다. 울퉁불퉁한 부분만 다듬으면 신체적 불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족한 것이다. 블럭의 교체만 있을 뿐 정작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보도블럭의 확충은 확대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그냥 장식용처럼 띄엄띄엄 형식적으로 설치한 곳이 많을 뿐이다. 물론 어느 곳에는 점자 보도블럭이 계속 이어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보도블럭으로 거리를 확보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보도블럭으로 거리를 다닐 수 있게 한 정책적 소산이 오히려 지금은 위험한 모습으로, 불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이다.

II. 사례모음

1. 점자 보도블럭의 장식화에 대한 사례

사례1

기사의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점자 보도블럭이 인도에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버스정류장과 철재구조물에 의해 끊겨있는 모습이다. 시각장애인이 이 점자 보도블럭을 믿고 가다간 부상의 위험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며 마산시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자각과 실무행정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필자가 장식화라는 말을 괜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기사가 보여주고 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1785&CMPT_CD=P0001

2. 보도블럭의 무분별한 교체

사례2

사례 2는 청주시가 멸절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이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에서 보다시피 점자 보도블럭이 끊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이 점자 보도블럭을 이용하다가 길을 잃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하게 블라드 근처에 점자 보도블럭을 설치한 것은 좋다.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도로 이어져야 할 점자 보도블럭이 끊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출처 <http://www.ccdailynews.com/news/114392>

사례3

이 기사는 인천시 남동구가 멸절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데 3억여 원을 낭비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을 위해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곳을 다니는, 그리고 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을 즐기러 온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 이러한 배려가 오히려 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 개최와 인천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는을까 하는 생각이다.

3. 기타 필자의 생활 속에서의 점자 보도블럭

- 필자의 생활 속에서도 흔하게 노란색 점자 보도블럭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점자 보도블럭의 설치 구조 모습을 보면 과연 시각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이고 행정을 집행한 결과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엉망이었다. 사례에서 보여준 사진들은 결코 저 지역에서만 보이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17 노인요양원의 허와 실

송혜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허약해진 몸과 심신을 달래 주기 위해 바쁜 가족들을 대신하여 돌보아 줄 노인요양원, 복지센터 등 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요양병원의 큰 증가에 따른 과잉경쟁으로 일부 요양병원의 부실한 운영과 노인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몇몇의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대하는 담당 복지사들의 태도 및 불성실성과 인권 무시에 대한 문제점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다. 기력이 없고 원활한 의사능력이 불편해진 노인이라는 점과 힘든 경영난으로 인해 대충 적당히 짜여진 일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물리치료 등의 횡수를 줄이고 여가활동의 기회를 줄이는가 하면 실수로 벗겨진 노인의 신발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고 던져주거나 같은 병실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가리지 않은 채 용변 통을 가리는 행동으로 수치심을 안겨주기도 하며 일상적 대화를 반말로 하거나 명령조, 무시조로 말을 하고 한번에 말귀를 못 알아들을 경우 욕설을 사용하는 등 인권이 전혀 없는 식물인간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보다 힘없고 밑에 있는 약자로 생각하여 노인을 대하는 일도 생겨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아직까지 요양시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난무 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만이 계속 사회적 이슈로 보도 된다면 생의 말년을 외롭지 않고 편안하고 아름답게 보내기 위한 노인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우울증과 무기력함을 혼자 달래며 하루하루를 무의미 하게 보내야 할 것이다. 많은 걸을 바라지 않는 노인들은 그저 조금이나마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말동무를 하고 움직이면서 바쁜 가족들 대신 복지사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외롭지 않은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선 한달에 한번씩 복지사들과 노인들의 대화의 장을 만들거나 생일 등을 챙겨줌으로써 요양원 전체 사람들과의 모임을 가짐으로써 노인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는 세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심을 심어 주어 편하



게 생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가족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만족도를 듣게 함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문제점은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 가며 이달의 최고 복지사를 뽑는 등 이벤트를 하면서 일로써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기력이 조금 떨어질 뿐 생각하고 느끼는 마음은 똑같은 인간이므로 끝까지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수치심과 억울함 등의 감정은 느끼지 못하고 편안함과 안정감 등의 잔잔한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노인의 권리와 인권을 인정해 주며 도와줄 수 있는 노인요양원의 증가와 발전하는 앞날을 기대해 본다.

19 인권과 에티켓

심재호

가) 버스 안에서 외국인이 타자 신기하게 보고, 우리말에 익숙지 못하다고 해서 놀림감을 만들거나, 혹시나 말을 걸까봐 두려워 외국인의 주위에는 앉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 모습이 꼭 동물원에서 새로운 동물을 보며 신기해하는 어린애를 보는 듯해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나) 사람이 북적이는 버스정류장에서, 외국인들이 주변 사람에 크게 피해가 갈 정도로 웃고 떠드는 걸 보았다. 비록 친한 친구를 만났다고,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 개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침해 할 정도의 소음은 인권 침해인 듯싶었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면서, 국내에도 수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에 비해,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하여금 기본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우리의 언어, 외모 등을 지니지 않았다고 해서 신기하게 여기고, 특이하게 생각하고, 무서움의 존재로 외국인을 피하는 태도는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인권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심하게 떠드는 행위는 개인들의 기본적인 사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인권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잊혀져가는 공공장소에 기본에티켓에 관한 포스터를 붙여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존중을 인식하게 하고, 학교나 회사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기본예의, 언어, 바디랭귀지 등을 교육시킴으로써 좀 더 부드러운 외국인 내국인간의 인권 존중과 기본예절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간단한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한 순간에 변화된 모습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생활에서 변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속 세상이 익숙하기 마련이다. 이는 직장인, 학생을 떠나 거의 모든 사회인들에게 있어 생활이라 해도 무방하다. 인터넷 도입 이후로 급진적으로 불어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비록 정부에서 예방차원으로 인터넷 법규를 제정하였지만 인터넷 속 인권침해는 모호한 기준만을 남겨 놓은 채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상 다수의 군중들이 한 특정인물의 신상정보를 캐내어 유포시키거나, 미니홈페이지, 혹은 블로그에 접속하여 익명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글을 남기는 데에 있다.

막무가내 식 마녀사냥, 그리고 흔들리는 다수의 네티즌들, 그들의 군중심리로 인한 합리화적 사고는 결국 그들은 익명성과 군중심리에 이끌려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다. 최근에도 이러한 다수의 공격으로 인간의 권리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한국을 떠나거나, 자살한 공인들이 빈번하게 마스크로 우리 곁에 다가온다.

현재 청소년, 성인의 인터넷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은 지금의 법규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놀랍게도 위의 마녀사냥의 군중들의 대부분은, 법률 처벌 규정에서 예외인 초등학교생들, 중학생들이다.

그래도 최근 초등학교 교과수업 내용 중 '네티켓 예절'이라는 수업이 있다. 하지만 접근방법이 틀렸다. 인터넷 보급률 세계1위인 우리나라, 그리고 미취학 아동, 초등교육생의 인터넷 사용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적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에는 안타깝게도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접근, 그리고 인권의 중요성,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수용으로 가장 크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온라인에서의 교육이라고 본다.

위와 같은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주니어 네

이버, 싸이월드와 같은 노출빈도가 높은 대형포털 사이트에서, 혹은 그들의 접근성이 높은 PC방 혹은 게임포털 사이트 첫 머리에 **인권에 기초한 네티켓 예절, 그리고 인터넷 법규관련 내용을 공익광고 형태로 제작하여**, 대상 연령대의 흥미를 높일 수 있게 의문형식의 돌출형 배너 광고형태로 제작하거나, (EX: 인권? -클릭 -자료제시), [인권 키워드 검색지수 상승-흥미유발하거나, 1초 혹은 2초간 의무적으로 배너 등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표적의 인권침해의 최소화와 차후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최소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기타 참고사항의 노출빈도와 구매율(전파 효과)] 참고

그리고 더욱 나아가 점차 더욱 방대한 온라인 속 '생활'을 접하게 될 그들의 '2세'에게까지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서 하나의 생활 속 인권실현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더불어 인간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인권이란 소중한 불씨가 어느 누구에 의해서라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은은하게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지구촌이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정보와 교통의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각종 교류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또 살고 있다. 멀리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선진국에서 왔거나 백인이면 좋은 대우를 받는데,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나 흑인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에서 백인과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인에게 길을 물을 때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 백인이 물었을 땐 대부분 친절하게 대답해주었으나, 이주노동자가 물으면 성의 없이 대답해주거나, 그냥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분명 나는 사회시간에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인권이 있다고 배웠는데, 자신과 다르다고 무시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사회시간에 배운 것이 현실에도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건지 의아해 할 때가 많다.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가 말했다. 똑같은 아프리카에서 왔어도 흑인과 백인은 차별되어진다고. 이력서에 경력을 적어 냈더니, 화려한 경력 덕에 회사에서 전화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실제로 얼굴을 보고 흑인인 것을 알자 “흑인이 제대로 일을 하겠어?” 이런 말도 서슴지 않게 하며 취직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에선 외국인 신입생을 뽑을 때도 만 사람들로 하여금 글로벌 학교라는 인식을 키우기 위해 흑인이나 백인 같은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사람들을 많이 뽑는 것 같다고 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들이 말했다.

역지사지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능력이나 정당한 기준 없이 단지 국적과 피부색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괜찮을까? 물론 당연히 우리도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외국인들을 차별

하는 것일까? 정말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소중하면 다른 나라 사람도 소중한 것이다. 더 이상 그냥 아무생각 없이 당연하듯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사에서나 대학에서나 직원이나 신입생을 고를 때도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사람을 뽑는 정당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배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그에 마땅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화 시대이니만큼 그에 비례하는 문화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문화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 또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캠페인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말뿐이 아닌 정말로 지구가 한 마을이 되어 차별 없이 서로 함께 어울려 나아가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해본다.



[사례제시]

- 강원지역 춘천, 원주, 강릉지역은 고교 비평준화 지역임. 이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들은 공공연히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성적 경쟁으로 치닫게 할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음. 학교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목적을 둔 공개라고는 하지만, 결국 심각하게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음.

- [성적공개 방법]

☞ (학교 현관 및 복도 게시대에 상시 게시)

춘천고교 등은 매월 치루는 전국 모의고사 성적을 전교 계열별 30위까지 복도와 현관 등에 붙글씨 등으로 커다랗게 마치 방문(榜文)을 붙이듯 성적순으로 게시함

☞ 대부분의 학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때 전교 석차, 반 석차를 한 장에 복사하여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

* [대안]

☞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물론 그러한 원칙이 있지만, 전국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지켜지지 않음.

☞ 개인의 성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학교는 교육청 별로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개인 성적은 학생 개인과 학부모에게만 알려져야 함.

세계에는 7대 불가사의가 있다. 하지만 인류 누구에게나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여자와 남자가 서로를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며, 파란하늘에 멋진 구름을 보면 상대방이 떠올라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이며, 조금이라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무슨 사고라도 난걸까?’라며 혼자 마음 졸이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을 꿈꾸는 것은 나이와 직업과 학력에 상관없는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심장을 다 줄만큼 사랑했지만 이별해서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사랑을 시작해보지 못하여 사랑의 설렘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랑이 열차로 표현이 된다면 열차의 두 바퀴처럼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곳을 향해 함께 쉽 없이 달리는 것이다.

사랑이 처음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의에 관심을 갖는다. 혹 이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느 순간 자신이 눈길이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때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자신의 눈이 어느 순간 한 사람에게 고정된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상대방이 자신을 인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이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처음 시작된 순간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

A: 야! 저 여자에 괜찮지 않냐?

B: 어? 누구? 저기 앞자리에 앉아 있는 단발머리 여자에?

A: 응. 각선미도 좋고, 지적으로 보이고, 피부도 하얀 것 같아.

B: 오, 괜찮은데? 딱 너 이상형 아니야?



A: 그러니까 말이야. 저런 스타일 내가 좋아하구나. 하하.
 B: 야, 수업 끝나고 가서 저 여자 좀 꼬셔봐. 너 그런 거 잘하잖아.
 A: 그래? 한번 꼬셔볼까?

위 대화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A라는 사람은 앞에 있는 여자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따라서 A는 앞에 있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떨린다고 말하고 손까지 차가워진 상황을 살펴보면 A는 앞의 여자가 진심으로 호감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상황에서 앞에 있는 여자도 A에게 호감을 느낀다면 둘은 연애라는 둘만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더 크게 바라본다면 일류시대사인 결혼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전개가 된다면 처음의 A와 B의 대화는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된다. 이때 위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는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이미 공중파 방송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계층에서만 '꼬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B의 3번째 대화에서 우리가 이제는 익숙해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꼬셔봐' 이다.

'꼬신다'는 이성 간에 남자나 여자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에게 만나 줄 것을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꼬신다'의 어원은 '꼬드기다'에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날리기를 할 때 연줄을 잡아 젖히어 연이 높게 날아오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에는 남의 감정이나 기분을 고취시켜 어떠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꼬드기다'의 어감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측면이 있다.

'꼬신다'라는 단어 또한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본다면 이를 듣는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을 얻어가려는 행위를 자신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느껴 자신이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꼬신다'라는 단어는 심하게 변질된 측면이 있다. 남성이 여성을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꼬신다'의 단어를

사용한다. 성적 쾌락을 위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단 하루밤의 관계를 얻기 위한 행동이다. 이는 여자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으로 여자를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 아닌 쾌락을 얻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확대해석을 한다면 '꼬신다'라는 단어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행위 및 쾌락의 도구로의 치부하여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꼬신다'를 대신 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하다. 필자가 생각해 본 단어로는 우리말의 '다솜'에서 시작된다. '다솜'이란 순 우리말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남녀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에 걸 맞는 수준의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꼬신다'는 동사형이므로 사랑을 뜻하는 '다솜'에 '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 따위를 품거나 기대하다라는 뜻을 갖는 '걸다'라는 동사를 결합하였다. 그리하여 '다솜걸다'라는 합성어를 만들어 보았다.

이는 사랑에 대한 희망을 갖고 상대방의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을 하는 행위로 남녀가 처음 사랑을 시작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걸맞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사회에서 남녀가 만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세대에 대해서도 순화된 말이 파급된다면 언어의 힘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관념이 진지하게 상대방을 생각하며 배려를 해야 하는 어렵지만 행복한 일로 바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을 보는 여자 측면에서도 자신을 낮춰 부르는 듯한 '꼬신다'라는 단어 보다는 '다솜걸다'라는 진지하고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들의 사랑이 이뤄질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나는 14살 여학생이고, 내 또래 아이들을 대표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나와 친구는 화창한 일요일 아침에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버스에 탔다. 버스에는 친구와 나 밖에는 없었는데, 시험도 끝났고 날씨도 너무 화창했기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덧 우리가 내릴 도서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고, 분명히 도착하기 30초 전쯤에 나는 벨을 누르고 버스카드를 찍었다.

하지만 버스 아저씨는 내려 주시지 않았다. 계속 가셨다. 이상해서 친구와 나는 “아저씨 왜 안내려 주세요?” 하고 여쭙더니 버스기사 아저씨는 말씀이 없으셨다. 못 들으셨겠지 생각하며 다시 “아저씨, 내려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무시를 하셨다.

그리곤 몇 백 미터를 더 가서 사람이 많은 버스 정류장에 내려 주셨고 우리는 처음 와보는 그 곳에서 길을 잃을 뻔 했다. 만약 친구와 내가 건장한 성인 남성 이었다면 그 버스기사 아저씨께서는 굳이 사람이 많은 버스 정류장에 가서 세워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아니라면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는 우리가 내려야 하는 정류장에서 내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설명이라도 해 주셨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기껏해야 힘없고 돈 역시 없는 여학생들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와 우리 또래들은 각종 멸시와 차별을 당해왔다.

프랑스는 어른이 어린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더라도 그 어린이가 그 심부름을 해야 하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으면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야말로 프랑스는 어린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내 또래 아이들은 차별을 받아온 존재들로 프랑스가 부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린이 멸시 사회에서 내 또래 아이들과 나는 내 깊은 마음속에 상처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에서 제제가 빨리 철을 들어야만 하고 그로서 많은 것들을 잃었던 이유가 사회의 환경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가며 각박

한 사회에 적응을 하고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모두가 알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사로운 잡초들을 제거하고 튼튼한 나무를 심을 때이다. 잡초들을 제거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잡초를 알아보는 능력과 협동심을 가져야 한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갖추도록 대우를 해주고, 나를 포함한 내 또래 아이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는 기본권의 종류로 다양한 권리들이 열거되어 있고, 우리는 국민으로서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 받는다. 또한 이러한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면 가지는 '인권'이라는 보다 거대한 근본적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 즉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인권이 실현될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호흡하고, 먹고, 걷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굳이 권리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본능적인 권리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걷는 권리, 마음 놓고 걸어 다닐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권리가 파괴된 공간을 살고 있다.

최근 “한국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OECD 1위”라는 2007년 OECD 통계가 발표되면서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자동차가 있기 이전부터 인간이 존재했고, 모든 사람들은 운전자이기 이전에 보행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교통문화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해 왔으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게 하였다. 자동차는 빠르고 편한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거대하고 단단한 자동차 앞에서 무방비 상태인 인간은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라 늘 조심스럽게 몸을 사려야만 하는 교통약자일 뿐이다. 언제 부턴가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 이전에 자동차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길이 늘어나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인간을 소외시킨 기현상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 자체가 주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자체는 권력과 힘, 가진 것을 상징하며 법 역시도 차 중심적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지금은 개정되었지만 8대 중과실이 아닌 이상에야 종합보험만 가입하면 형사소추를 면제해 주었던 과거 법제도는

공격적인 운전관행과 운전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유지하게 한 주요인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동차로 상징화 되는 강자 편의적 사고는 비인권적 교통문화와 길을 형성해 이것에 대한 '권리감'마저 상실하게 했다.

자동차 자체가 무방비 상태로 보행해야 하는 사람들보다도 이미 강자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자동차는 당연히 보행자보다도 조심을 해야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보행자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을 할 권리라는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필자가 작년에 유럽여행을 할 기회가 있어 소위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스위스, 영국, 프랑스 등을 여행하면서 겪었던 부적응 중 하나는 첫째, 육교가 희소한 시설이었다는 것과 둘째, 신호등이 없는 횡단로는 물론 신호등이 있는 횡단로에서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무수한 차들을 정지시키고 당당히 보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에 슬며시 웃음이 난다.

한국의 상황은 이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시간을 다해가는 초록불이 반짝거릴 때 짹째 달리기라도 할라치면 차들이 뺨뺨거리며 야유와 협박을 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로에서 무방비 상태의 인간인 내가 선 진입을 하여도 멀리서 빈틈을 노리고 달려오는 차를 피하느라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 또한 나는 건강한 신체를 가졌기에 망정이지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의 경우 신호등의 점멸시간은 매우 짧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좁디좁고 위험천만한 보행로에서 눈치 보며 길을 건너야 하는 시골의 국도나 일반 학교 앞이나 골목길, 주거지역 등 좁은 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의 경우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로 인해 보행에 위협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초래해 이 역시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은 교통문화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육교의 경우 자동차 편의적인 시설물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가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만든 시설로서 (물론 요즘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육교가 있다고 하여도) 무수한 세월동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장애인, 노인 등-은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고, 보행하는데 있어서도 차별을 받은 소수자임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선진 교통문화에 비해 한국의 교통문화가 열등하다는 비교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절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떤 분야에서 보다도 육교 건너기나 신호등 지키기 등에서 규범 준수 의식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자기보호 논리에서 나온 처절한 규범 준수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이 길을 차에게 내어주고 보행권이라는 세계만민이 누릴 지당한 인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복권되어야 할 권리인 줄도 모르고 지나쳤던 과거와 달리 우리는 자동차와 길에게 인권의 이름으로 보행권을 주장하며 시정권고를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에 보행자의 보행권이 길 위에서 배려 받기 위해 여러 의식변화 및 제도와 물적 기반 구축 등이 요구된다.

우선 신호등이 없는 횡단로에서 보행인의 전적인 우선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보행자가 선진입한 경우는 물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호 없는 횡단로 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전적인 운전자 책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페널티를 강하게 부과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호등이 있는 횡단로에서도 정차선을 지키지 않는 차들이 많아 보행인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록 많은 비용이 유발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일지라도 교차로와 횡단로 주변에 노면을 높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 주택가 근처 역시 서구의 '보차 공존도로'와 같이 노면 울퉁불퉁하게 하기, 차로 좁히기, 지그재그형으로 차도 놓기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시도가 될 것 같다. 소외되었던 좁고 위험한 농어촌 지역 도로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도 설치와 노면 확장 또한 시급하다. 육교시설은 자동차 중심적이고,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든 시설물이므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시도가 요청되며, 신호등의 점멸 시간도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거대한 변화를 유도해 내는 행위의 유인은 모든 개인의 지성 속에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보행권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신선한 충격이 아닐까?

‘인권’ 의식은 거대한 무언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길의 모습, 건물의 모양 등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모든 강자일 수밖에 없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보행권에 대한 존중을 통해 새로이 변화하는 인권의식을 뿌리내려 안전하고 편하게 걸어 다닐 권리를 존중받아야 할 또는 그 권리를 찾아올 때이다.



- ▲ 보행자가 직접 컨트롤하는 횡단보도
- ◀ 육교
- ▼ 도로 위의 지그재그선



공무원후견인 + 국민의 창의적 발상

====>>> 묶음창의제안아이디어

기술, 행정적인 처리와 관련법에 충실하고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국민의 반짝이는 창의제안의 생각을 섬세하게 다듬어주고 키워주는 창의제안을 하나로 묶는 공무원+국민과의 듀엣북을 창의제안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국민의 창의적발상의 듀엣북을 창의제안제도라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국민이 낸 창의제안에 대한 관심과 비슷한 생각을 관련 부처 공무원이 협력하여 함께 만드는 화합형 창의제도를 말하며 1인 이상의 공무원과 1인 국민을 1조로 묶어서 창의제안 키우기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제안과 국민제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국민의 창의제안에 대한 공통된 창의제안이 나오면 관심을 가진 공무원이 후견인으로 참여하여 기술적인 면, 경험, 행정적인 처리를 토대로 창의제안을 섬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국민+후견인 공무원의 묶음창의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국민제안이 관련 부처 담당공무원의 생각이 중복되거나 국민 창의제안에 대한 깊이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으며 창의제안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서 선정되지 않았을 때 국민이 제안한 창의제안에 대한 사기가 수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각 지자체의 창의제안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객관적인 신뢰를 더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창의제안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 창의제안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전에 국민의 법령, 조례상식이 부족하고 담당공무원의 성실한 참여와 국

민의 창의제안에 대한 후견인으로서 세밀한 내용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좋은 창의제안인데도 불구하고 부실한 제안으로 판단하여 결과와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국민의 창의제안을 받게 될 각 담당부처의 담당공무원 외에도 또 다른 창의제안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이 기술적인 측면, 경험을 토대로 함께 국민의 창의제안을 키워주는 듀엣북을 식 창의제안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함께 국민제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적하고 현실에 맞는 제안으로 바뀌 현실에 맞게 제안을 다듬어주어 좋은 제안이 되려면 국민제안의 다각도로 관심을 가지는 담당공무원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도 국민의 창의제안이 성숙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과 호응이 함께하고 협력하여 좋은 창의제안서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러다보면 공무원과 함께하는 시민고객의 창의제안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의제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후견인인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듀엣 묶음창의제안을 통해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함께한 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에 좋은 점수와 포상을, 국민에게는 공무원 입사 가산점과 포상을 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진정한 창의제안의 조화와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공무원+국민과 함께하는 듀엣하모니 창의제안제도는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담당부서의 많은 공무원 중에서 국민의 창의제안에 대한 관심이 많고 후견인이 되어 창의제안을 살리고 함께하는 제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무원이 낸 창의제안 아이디어도 관심이 많은 국민이 후견인이 되어 쌍방 간의 창의제안을 키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안서를 작성하기 전 24시간의 일상생활 동안 주제로 채택한 혈액형을 통한 차별관련 자극에 몇 번이나 노출되는지 세어보았다.

아침출근길 광고부터 스포츠신문의 혈액형별 애정표현 관련기사 케이블 TV의 혈액형별 맞춤 영화 특선까지 일부러 세어보니 하루 12번의 노출이 있었다. 어느 사이에 혈액형이 기초한 성격유형나누기와 그에 기초한 대인 관계 속 선입견들이 단순한 재미거리를 넘어 자연스러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있는 셈이다.

B형은 이기적인 측면을 내포하므로 배신할 능성이 많고 A형은 아기자기 하지만 소극적이다 식의 혈액형과 성격을 연관시키고 나아가 특정혈액형과 잘 어울리는 혈액형이나 행동양식(공부스타일 옷 입기 방법 등등)을 소개하는 식이 우리사회의 전형적인 혈액형에 대한 반응이다.

이런 사회현상은 잘 알다시피 일본에서 유래하여 전 세계에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문화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심리학에서도 관련 연구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해당하는 애매한 정의들을 나열하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사실을 반영하는 듯한 착각을 만들어내는 현상인 바넘 효과의 전형적인 효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왜 이런 전혀 객관적이지 못한 사실을 사람들은 그토록 맹신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유형나누기는 결국 특정 혈액형들에게 불리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근거 없는 편견에 기초한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특정혈 혈액형들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은 채용이나 개인적 대면관계시의 판단 기준으로 자리잡기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례1

“혈액형 O형과 B형만 채용합니다~~”-조선일보 신문기사 인용

=농협중앙회 한밭사업단 혈액형으로 지원자 제한...물의 빗자 취소

대전에 있는 농협중앙회 한밭사업단이 공제보험 담당 직원 20명을 모집하면서 혈액형 O형과 B형으로 지원자를 제한하다 물의를 빚자 취소를 해프닝을 벌였다.

한밭사업단은 지난 18일 취업알선 사이트인 ‘대전인쿠르트’에 “혈액형 O형과 B형이신 분만 지원주세요, 다른 형은 지원 삼가 바랍니다. 다른 형은 추진력이 없어요”라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냈다.

사례2

=유명 결혼정보회사인 D모회사에 따르면 중매를 신청하는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중매를 신청하는 미혼여성 중에서 특정 혈액형은 제외시켜달라는 비율이 20~30%에 달한다. 주로 B형이지만 AB형을 피하는 여성도 가끔 있다고 한다.

사례3- 부산일보 신문기사 인용

=지난 10일 오전 부산 모 아파트에서는 13세 여중생 A양이 엄마와 싸운 후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이 입수한 A양의 유서에 따르면 A양은 “A형이 원래 그렇잖아요. 잘 못 잊잖아요.”라며 어떤 문제로 상처받고 고민하는 것을 곧장 혈액형 탓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춘기 시절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일로, 적극적 사고로 받아들이기보다 혈액형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소극적 숙명론으로 받아들여 죽음에 이르게 한 한 원인이 된 것 같아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고 말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선 문제의 원인에 대해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혈액형을 근거로 한 가치판단의 뿌리는 인종차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짜 맞추기 학문인 우생학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태생부터 차별과 편견을 깔고 있다.

참고자료

.특정혈액형에 대한 편견은 인종주의의 산물-SBS스페셜인용

우리사회에서는 특정 혈액형에 대한 차별인식이 강하게 깔려있다. 특히 B형 혈액형에 대한 편견이 많다. 우리사회의 'B형 죽이기'가 독일에서 시작되어 일본으로 건너온 '인종주의'의 산물이다. 동양인은 B형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또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B형이 많아 언제든지 우리에게 대한 근거 없는 편견으로 악용 가능한 근거였던 셈이다.

A-O-B-AB 혈액형 간의 비율이 일본은 37.3%-31.5%-22.1%-9.1%이고 한국은 34%-28%-27%-11%였으며, 한국의 B형 비율은 일본보다 약 5%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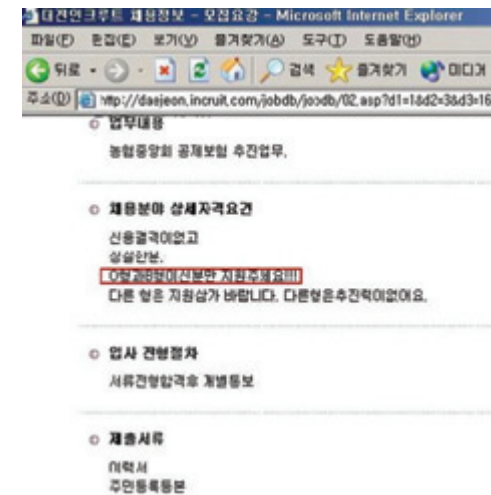
세상에는 객관적인 무엇이가를 정의한 사실이 있고 개인마다 관점이 다른 견해가 있다. 견해는 그 내용이 반드시 진실일 필요까지는 없다. 게다가 모든 사람의 신념이나 믿음이 사실일 수도 없다. 혈액형에 대한 믿음도 견해이니 타인의 견해를 존중해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잘못된 견해가 갈등을 조장하고 타인의 삶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고쳐야한다.

대안

1. 혈액형에 기초한 유형나누기가 인권침해라는 공감대 형성부터 필요하다. 문제의식이 부족한 부분은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 특히 상업주의 바람을 탄 혈액형별 편 가르기는 인간의 성격을 하나의 틀 안에 가둔宿命론에 기초하기도 하므로 인격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균형 있는 정보제공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2. 일본에서는 지난 2004년 한 해 혈액형 관련 특집프로그램이 40편이 넘게 제작되었으나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BOP)]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근거 없는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뒤부터 방송사가 거의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세인들의 혈액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에서도 흥미위주 상업코드만 적용하며 오늘이 시간에도 방송중일 혈액형 코드를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자제하는 제도적인 접근이 시작되어야한다.

▼ 농협 혈액형 채용공고



2007년 여성가족부가 한국의 회식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실시했던 연구결과를 보면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1170명중 회식문화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72%에 달했다.

거부감을 표현한 주요원인으로는 강권하며 2차 3차로 이어지는 음주관행을 1위로 들었다.

같은 해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802명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잦은 모임, 과도한 술자리 등으로 인한 연말 후유증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무려 71.3%의 직장인들이 '후유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회식문화 속 음주 강권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

회식문화 속 음주행위들이 조직 내 결속력을 강화 한다 식의 환상을 깨는 연구 결과들이다. 특히 음주강권행위가 지닌 인권 침해적 요소는 알코올이 분해되는 생리적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적나라하게 들어난다.

체내에 들어온 술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인 ADH 효소에 의해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고 이 물질은 다시 ALDH 효소에 의해 무독성의 아세트산으로 전환되는데 한국인중 상당수는 이 알코올분해 요소가 부족하거나 아예 형성이 되지 않기도 한다는 점이문제이다.

결국 술을 잘 마신다는 것은 알코올 분해효소가 얼마나 원활히 분비되어 간에서 해독을 잘 해내는가에 달려있는 셈인데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 분해효소의 분비량이 많지 않으면 심지어 분비가 되지 않는 사람도 상당수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톨릭대 성가병원 김대진 교수와 한림대 최인근 교수의 알코올 분해효소의 다형성과 알코올중독과의 위험성을 분석한 공동 연구 결과를 참고해보면, 분해효소가 부족한 정도를 넘어 음주대사가 잘되지 않아 음주자체가 음독

행위를 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등 유전적으로 알코올 부작용이 있는 한국인은 전체의 약 25%에 해당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들의 경우 알코올이 잘 분해되지 않아 혈류 내에 보다 오래 동안 남아 있게 되어 숙취 등으로 고통을 더 받고 심지어 음주로 인한 뇌 조직에 손상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에만 존재하는 술잔을 돌리고 강권하는 음주문화는 본래의 정을 돌린다는 좋은 취지를 넘어 음주속도를 빠르게 하고 음주를 거절하기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만들어내면서 음주가 생리적으로 어려운 유전인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알코올을 마시는 음주가 아니라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음독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셈이다.

결국 음주중심의 강권하는 회식문화는 매년 6000명 이상의 음주사망사고와 수많은 갈등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기본권과 건강권 침해 행위이지만 음주강권이 인권침해가 된다는 인식은 우리사회에서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잔을 받는 사람 역시 인내하고 감수해야할 과정으로만 여기는 행위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대안

1. 원하지 않는 회식문화 속 음주강권행위는 상대방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국민 중 최소 25%의 알코올에 취약한 유전인자를 지닌 이들에게는 음독을 강요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2. '음주' 중심의 회식문화가 만들어내는 강압적인 분위기와 성희롱과 갈등 유발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유하는 문화' 중심 회식문화를 대안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터넷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가수 박재범군 사태도 바로 이에 속한다. 어린 연습생의 신분으로 개인적인 공간에 나섰던 푸념이 이토록 뜨거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에는 인터넷 여론이 있었고, 그 여론이 형성된 근본에는 바로 무분별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행태가 자리 잡고 있다.

한 네티즌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된 박재범군의 글은 캡처 되어 4일 만에 무려 700여건의 기사로 인터넷에 쏟아졌고 그 기사들은 논란이 되는 발언의 정확한 해석이나 시점 등 사실규명보다 같은 내용을 보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재생산해 내기에 바빴다.

이는 결국 한 개인을 줄지에 한국을 비하한 꼴 보기 싫은 매국노로 낙인찍어 애초의 본질보다 크게 확대되고 무분별한 비난여론만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이런 비난여론에 결국 박재범군은 5년간의 한국 생활을 뒤로한 채 단 4일 만에 팀을 탈퇴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갔다.

박재범군의 탈퇴가 있는 후 발언을 했을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에 대한 이해의 목소리와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논란의 중심에 그릇된 여론몰이가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재생산되고 확대 해석되는 인터넷기사로 인해 우리는 무대 위에서 빛나던 한 가수를, 그리고 모국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있던 한 청년을 잃은 꼴이 되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가장 우선으로는 기자 실명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인터넷 기사의 하단이나 상단을 보면 그 것을 집필한 기자의 이름과 메일주소가 대부분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기자입장에서 이 기사를 작성했다는 최소한의 서명일 뿐이므로 기사에 책임감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작성한 본인의

사진과 정확한 소속을 함께 기재하여 사회전반에 보다 철저한 기자 실명제가 정착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 언급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출처기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면 ‘관계자에 의하면’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말이 언급된 내용은 대부분 추측이나 자극적인 가십기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출처 제시는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추측성 기사의 양을 줄이고 인터넷 언론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다.

언론의 힘이 무력보다 호소력 짙고 영향력 있다는 사전적 정의를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한 마디의 말이, 한 줄의 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것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삶의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박재범군 사태로 또 한번 절감하였다.

사람이 한 번 잘못 내뱉은 말은 주어 답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는 있지 않은가?

조금만 더 관대하게 타인을 헤아려보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키는 이미 한 뼘 더 자라있을 것이다.



생활속의 인권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례제시 및 문제제기

: 공공시설 및 거리 등에서 장애인의 생활불편개선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과 배려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한 시설의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로 공공시설이나 기관에서 이동에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엘리베이터는 일반인의 기준에 맞추어 설치되어 있다보니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은 층을 누를 수 있는 표식이 너무 높아 주변인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의존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다보니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자칫하면 문에 끼여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및 사회적 파급력 등 설명

: 엘리베이터의 층을 누를 수 있는 위치를 아래쪽에 따로 마련하여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이 쉽게 누를 수 있도록 하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시간을 조금 늘려 장애인이 위험 없이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건물에 이런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장애인이 자주 찾는 정부 관련기관이나 공공건물에 먼저 설치하도록 합니다.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엘리베이터가 일반인에 기준에 맞추어져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편과 위험을 주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당시 과학 선생님이 자신의 수업시간에 친구의 머리가 길다며 반 친구들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친구의 머리를 한 부분만 짧게 가위로 잘라 낸 모습을 본적이 있다. 머리를 잘린 친구는 수업시간 동안 시무룩한 표정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친구에게 어떤 말도 나는 건넬 수 없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얼마나 큰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가졌을지는 당사자가 아닌 나 역시도 예상이 갈 정도였다. 그 뒤로 그 선생님은 등굣길 교문 앞에 서서 한 동안 계속해서 친구, 선·후배들의 머리를 자랐다.

그리고 한참 뒤 다른 선생님의 수업시간에 왜 우리가 머리를 잘라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묻자 선생님께서는 교칙에도 나와 있고 학생은 학생다운 머리를 해야지 예쁘고 공부도 잘된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학생다운 게 무엇이고 머리길기와 공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한참을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은 개인의 개성과 신체적 특성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두발관련 교칙 또한 개인의 신체에 대한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에 명백히 어긋나기에 사법부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사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는 상위법인 헌법보다는 교칙이 현실적으로 우위에 놓여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우위에 있게 된 교칙이라는 게 현 재학생들의 입장이나 시대상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개교나 과거에 규정이 그대로 쪽 내려와 다원화시대에 살고 있는 개성강한 학생들에게 대물림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받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되는 사실은 자신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알릴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 현행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명목상의 기관이 존재할 뿐 그것은 형식에 불

과하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불가능 하며 그 사이에는 학생회 주인인 학생이외의 목소리가 들어있어 학생들 자신들의 의견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를 이끌어 나갈 주체인 학생이 자신들의 두발규정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내세우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대표해 줄 기관을 확립하고 학교 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노력이 모아져 학생들의 의견을 낼 독립된 기관이 형성되면 그 기관을 통해 두발자유에 대한 권리를 학교에 표명할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교칙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국회에서 발의 되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국회에 표류중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힘을 통하여 학생의 두발을 포함한 신체적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가 실행 될 수 있도록 학생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속의 인권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례제시 및 문제제기

대학교를 가면, 장애인 주차 시설, 휠체어가 건물 입구로 이동할 수 있게 언덕 형태로 이어 주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 내부의 강의실에는 비장애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 그리고 강의실 문, 단상, 등 비정상인들 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강의실의 내부에는 책상과 의자가 강의실 내부를 꽉 차지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또한 계단 형태의 강의실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쉽게 이동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및 사회적 파급력 등 설명

첫째, 강의실의 문을 기차에서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문이 미닫이 식으로 움직이기에 휠체어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다른 학생들도 문을 쉽게 열고 닫아 편리해 질 것이다.

둘째, 강의실 내부에 의자와 책상의 개수에 따른 의무적인 장애인 자리 설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50개의 의자와 책상이 있다면, 최소한 2자리 정도 장애인용 자리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일시적 장애 즉, 다친 사람들도 이용 할 수 있다.

셋째, 저 시력인 사람들을 위해 바닥에 노란색 줄, 혹은 타일로 책상과 의자까지 이동할 수 있게 만든다.

넷째, 휠체어 등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놔둘 수 있는 공간의 확보이다. 강의실이 비좁을 수도 있지만, 창가 쪽, 강의실 뒤편 등 남는 공간에 그런 장소를 확보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계단식 강의실의 경우에는 문 근처의 의자들은 같은 층에 있고, 양 측면에 쉽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언덕을 만든다. 그리고 자리를 확보한 곳에는 휠체어를 고정시키고 책상이 올라오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을 한다.

다른 예로 단상은 언덕을 만들어 이동하기 쉽게 만드는 등 더욱 많은 것들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교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이런 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32 대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인권침해사례

정유라

대학교도 학교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성적을 쥐고 있는 사람(교수, 강사 등)들과 평등하지 못한 관계를 가진다고 본다.

여기에 학과사무실에서 일하는 조교도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되기도 한다고 보는데, 이들은 학생에게 있어서 성적과, 정보제공 등의 면에서 권력을 가진다고 본다.

조교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알고 심지어 석차, 개인정보 등도 안다. 그런데 이를 본인의 허락도 없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교들과 친한 소위 학생(총대, 기타 친한 사람들)에게 누가 몇 등을 하고 누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으며, 개인정보까지도(가족관계 등) 이야기가 오간다는 사실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본인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던 성적이나 석차 또한 다른 이는 아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서 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에 의해 학과를 찾았을 때, 자신과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불친절하게 대하고 친한 사람에게서는 조교로서 줄 수 있는 것을 무한하게 주는 태도가 인간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본다.

위와 같지 않은 조교들도 많겠지만 위와 같은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현재 발간되는 신문기사 중, 몇몇 기자들이 취재원을 지칭하면서 여성의 경우에만 따로 성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의 경우는 “대구에 사는 홍길동(40. 회사원)씨는…”이라고 쓰면서, 여자의 경우는 “대구에 사는 홍길동(여. 40. 회사원)”이라고 씁니다.

기사의 내용이 성별과 관련이 없는 데도 굳이 성별 표기를 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성별을 의식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진이 크게 실려 있어서 누가 봐도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굳이 성별을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성별 표기를 안 하는 것이 옳으며, 기사의 내용상 굳이 성별 표기를 해야 한다면, 남·녀 모두를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기사 내용 중에 풀어서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매체에서 어느 한 성별에만 표기를 하는 것은 그 성별을 무슨 별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런 존재로 낙인찍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성별 표기를 없애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성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길들여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별 둔감성”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매사에 성별을 따지고 의식하기 보다는 “그냥 모두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편적 인권 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일찍이 군대에서의 규율을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등에서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런 모습들이 시간이 흘러 많이 개선되었는데, 하지만 아직 곳곳에서 군대식의 흔적이 흔히 발견된다.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한 사회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작은 시작이다.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해 복학한 복학생들은 어떤 면에서 학교를 ‘군대화’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년여의 기간 동안 상하관계에 익숙해있던 그들은 복학한 후 후배들에게 은연중에 복종을 강요하고 상하관계에 어긋나는 행동은 ‘군기잡기’를 통해 관리한다.

다수의 복학생이 그렇지는 않지만 2년간의 타성은 어느 정도 잠재되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행동들과 잠재된 의식들은 학교를 병영화하고 나아가 졸업 후 사회를 병영화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군 제대 직후 복학생들을 위한 인권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군을 막 제대한 복학생들에게 시행될 인권교육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각 대학단위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소수의 교육으로 파급효과를 누리는 것보다는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해 일반화시키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내용은 전반적인 인권교육의 내용과 더불어 ‘성’에 관한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군대 내에서 받아들이게 된 왜곡된 성 관념이 오랜 세월 삶을 지배해오는 것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이는 인권사회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군 제대 복학생들을 위한 인권교육은 여러 의미에서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국방의 의무를 저야만 하는 개인 하나하나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이 사회의 모두를 위한 일이다.



정기적으로 몸의 상태를 검진 받아야 하는 비정상인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혼자서는 눈앞에 있는 문턱을 넘어 갈 수도 없었고, 혼자서 밥도 연필을 잡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조그마한 꿈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꿈조차 꾸지도 못할 것이다. 왜 비정상인들이 꿈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는 정상인이 주는 비정상인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상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다른 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예를 들면, 손 한쪽을 쓰지 못하는 비정상인이 있다고 치자, 이 비정상인도 먹고 살기 위해 회사라든가 아르바이트에 이력서를 넣는다면 이력서를 보지도 않고, “손 한쪽 못쓰는 사람은, 고용하지 못할 거 같네요.”라고 말할 것이다.

좀더 날이 가면 갈수록 나라에서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사람을 원할 것이다. 그러면 비정상인들은 생계유지도 엄청 힘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는 한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비정상인은 정상인에 비해 몸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정상인도 정상인 못지않게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다.

나는 비정상인에게 꿈을 품어 주기 위해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정상인들과 비정상인은 똑같다고 정상인들에게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서로를 도와가면서 하는 체육활동 그리고 비정상인들에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전동휠체어를 대여해주고, 가격을 많이 인하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비정상인들이 아무 곳이나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지하철, 버스 등 교통시설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비정상인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펜으로 글을 쓸 수 있고 타자를 칠 수도 있고 혼자서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게 손가락 교정기를 만들고 무료로 나눠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 하나는 비정상인이 정상인과 똑같다는 인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노력해야 할 일인 것 같다. 그래야, 비정상인도 정상인과 같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서 정상인과 같이 그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바이다.



직업란에 고등학생이라고 당당하게 적었던 시간은 흘러 어느덧 어른 대접 받기를 바라는 대학생이 되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여전히 변함이 없듯, 부모님의 걱정과 애정 어린 참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지나친 참견은 자칫 자녀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한 일례로, 나와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친구와의 문제로 예민해졌던 나에게 그 사건은 어머니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생활 침해에 따른 불쾌감을 주었다.

한참 친구와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다 싸움으로 번져 씹씩거리며 잠든 내게, 살포시 내 방으로 와 나의 휴대폰을 열어 이리저리 무언가를 확인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놀란 마음에 벌떡 일어나 이건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내게 어머니께서는 소리 없이 휴대폰을 닫으시며 A와는 무슨 사이이며, 술 모임 약속이 왜 이렇게 많으며, 네가 잘못된 것이니 B에게 먼저 사과하라는 등의 방금 주고받은 문자내용 및 저장 문자까지 지적하셨다.

어머니께서 내가 잘 때 몰래 내 휴대폰을 열어보셨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보다 모든 개인적인 문자를 확인하였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었다. 울먹거리는 나의 표정을 보신 어머니께서는 ‘이건 다 널 위한 거다’라며 사생활 침해를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켰다.

관심을 받기 바라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존중 받기를 바라던 내게 그 사건은 고마운 기억이 아닌 상처로 남았다.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의 문화가 으레 그러 하듯, 부모 및 연장자는 자녀

및 나이가 어린 사람에 비해 인권이 더 존중 받고, 어린 사람에 비해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더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인권의 무게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 대한 사생활 침해 행동이 모두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에게 받는 애정만큼이나 존중받기를 바라는 자녀들이기에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인권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증대를 통한 사생활 보호이다.

앞서 언급했듯 부모의 간섭 및 사생활 침해는 자녀에 대한 애정 및 관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자녀에게 느끼는 관심사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심사를 대화를 통해 풀지 않고 일기장 및 자녀의 휴대폰 문자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간접적인 정보수집으로 부모는 자녀에 대해 오해하고 실망 할 수 있으며, 자녀 또한 수치심 및 부모에 대한 실망으로 확대될 수 있다. **자녀의 마음을 알기위해 꼭 일기를 보거나 문자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식사 자리 및 저녁 여가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근 고민이 무엇인지 등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결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부모의 역지사지 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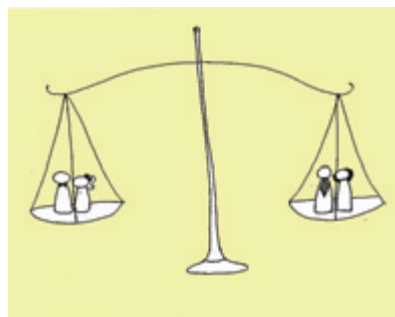
부모 또한 처음부터 어른이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자신 또한 어린 시절을 겪은 자녀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사생활을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진다. ‘내가 부모가 되면 내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해 줄 것이다’라는 어린 시절의 각오를 떠올리며, 자녀가 말하기를 혹은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내가 어릴 때는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었단다’ 등과 같은 이해와 격려의 방식으로 배려한다.



마지막 방안으로는 가족 구성원 지켜야 할 가정헌법을 합의하에 만드는 것이다.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제1회 가정헌법 만들기 대회를 개최되었다. 우수상 수상작들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각자 이것만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을 규칙으로 만들어 서로를 존중해 주었다. 이러한 가정헌법은 서로를 읊아매는 제도가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구성원 전부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규칙이다.

우리가족 가정헌법 만들기를 통해, 자녀들은 자신의 인권을 가족이 만든 헌법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 있고, 사생활 문제에 따른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미리 정해진 가정 헌법에 의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헌법을 함께 만들어 가고 불편한 사항들을 조금씩 수정해 감으로써 가족 간의 애정 및 결속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나이와 체격, 신분은 달라도 사람의 인격은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



(그림설명: 나이와 지위는 달라도 사람들의 인격은 동일한 무게를 갖습니다.)

와 자녀의 인격무게는 각각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침해 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지나친 참견보다는 따뜻한 배려와 대화를 통해 자녀를 존중해 줄 때, 부모와 자녀는 더 옥더 가까워지고 행복해 질 것이다.

사례)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역사적으로 지역 간의 갈등은 항상 있어 왔다.

인생의 70% 이상을 고향 안에서만 지낸 내게 언론에서 말하는 지역감정이란 나와 상관없는 그저 하나의 단어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라는 딱지를 떼고 학업을 위해 홀로 타지로 갔었을 때 처음 받았던 타 지방인이라는 차별은 아직도 지도 상처로 남아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었다는 긴장과 기대감으로 부푼 대학신입생 환영식 때의 일이다.

신입생들과 선배들 간에 간단한 인사와 소개가 이어졌고 '고향이 어디냐?' 라는 질문이 오가게 되었다. 학교의 특성상 부산지역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다보니 '고향이 어디냐?' 라는 질문은 '부산, 어느 동에 사느냐?' 로 바뀌어 오가게 되었다.

신입생들은 곧 '부산출신 대학후배들' 과 '그렇지 않은 후배들' 로 나뉘게 되었다.

소외감은 모두 함께 하는 게임에서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

신입생과 선배들 모두가 참가하는 게임을 '부산 지하철 노선역 이름' 누가 더 많이 말하느냐로 하게 되었다. 이곳에 온지 채 이틀이 되지 않던 내겐, 노선역 이름은커녕 지하철을 목적지까지 올바르게 타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었다.

결국 수많은 노선역 이름 중 하나조차 외우지 못한 나는 계속해서 벌칙 주를 마셔야만 했다. 벌칙 주보다 더 쓸쓸했던 건, 타 지역 학생을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고 오히려 밀어내려고 하는 그 분위기였다.

학기가 지남에 따라 지역 할 것 없이 서로 친해졌으나, 해가 바뀌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신입생 후배들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지하철 노선역 이름대기' 게



임을 하는 등, 타 지역에 대한 차별이 반복되었다.

개선방안)

한국은 지역감정 및 차별이 꽤 오랜 시간 있어왔기에 한국인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 및 어린이의 경우에는 다르다. 이들은 타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인들에 비해 배타적 지역감정이 크지 않다. 이때에 형성된 가치관이 성인이 돼서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지역 차별이 인권침해 사항임을 교육시킨다.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등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임을 분명히 아는 학생들에 비해, 지역 차별 또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아는 학생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은 단지 '차별은 나쁘다'라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토론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를 통한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 부모를 통한 교육도 중요하다. 별도로 학부모 강좌를 열어 지역감정이 그릇된 것임을 인식시킨 후 자녀의 올바른 인성양성을 위해 자녀에게 실천적이고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알린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대학생 교양강좌의 개설추진이다. 인권문제가 기초영어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는 이러한 강의가 개설된 곳이 많지 않다. 교양이 마음의 윤락을 위해 필요한 만큼 인권에 관한 강의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대학 재정상 및 기타이유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주기적으로 인권 전문가를 모신 특별강의를 만들어 짧게는 1~3시간 형식의 초대강의를 통한 교육을 한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인 만큼 인권침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감정이 직, 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바로 선거 때이다. 이왕이면 나와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을 뽑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지만 이 지역사람 이니까 '어떠어떠할 것이다'라는 편견은 현명한 투표를 가로막는다.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으레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대표가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감정 개선, 세 번째 방안으로는 이같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타 지역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해오던 정치적인 문화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동안 지역감정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해왔던 정치인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인식변화이다. 어디어디 지역 출신이라는 배타적인 감정을 버리고 우리는 모두 한국인, 한국 출신이라는 한마음 아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는 한국경제를 더욱 발달시키며 한국을 더욱 정겨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내가 사는 지역이 무조건 국가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균형 있는 도시개발이 가능하다.



(→그림 A, 주제: 지역은 차별을 위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역감정과 차별, 그리고 인권침해. 차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배려를 통해 새로 온 지역에 익숙하지 않는 타지의 사람을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차별이 아닌 구별이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배려하는 등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대할 때, 인권은 더욱 더 대중화되고 생활화 될 것이다.

“너 참 요리도 잘하고 얌전 하구나 참 여성스럽다.”

“개는 일 잘하고 당당한 모습 보니 남자다운 것 같아.”

여성스럽다 남자답다 로 성역할을 제한하고는 합니다.

생활 속에서 무심코 쓰이는 말들이

“여자는 그래서 안 돼.” “나서지 말고 커피나지 그래 미스 김.”

이 됩니다.

ex) “나는 나답다.” “여성스럽다 = 남자답다” 등의 슬로건을 내세워 성차별적인 언어들을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합니다.

슬로건 공모전, 성차별적 언어 바꾸기 캠페인 등을 통해 관심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성차별부터 바꿔 나갈 때 양성평등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년 전 언니 네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모든 짐을 들이고, 가스렌지를 놓는데, 넓이는 맞게 들어갔지만, 높이가 한층 더 높았다. 보통 가스렌지 규격에 맞춰 공사를 해놓은 거였지만, 언니 네 가스렌지는 아랫부분에 그릴이 들어간 가스렌지이다 보니 높이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한층 높아진 가스렌지를 사용하려다보니 키 작은 나에겐 팔과 허리를 아프게 하는 것 중 하나였다. 요리를 하게 되면 다른 무엇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가스렌지이다.

편리하고자 사용하는 가스렌지가, 평균만을 생각한 이들로 인해 불편함을 준다면, 또한, 그로인해 주부에 허리와 팔과 가끔은 까치발을 들어야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면 문제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준점을 두고 가스렌지 자리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평균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균과 일반적인 것만을 고집하지 말고, 좀더 깊은 배려와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점점 사용량이 늘어나겠지만, 가스렌지를 대신할 전기레인지나 인덕션레인지는 지금에 일반 가스렌지와는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

그렇다면 평균을 고집하여 주방을 만들 것이 아니고, 요즘 많이 나오는 빌트인 형식으로 맞춤주방을 만드는 것과, 또한 그 부분을 렌지에 맞출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설치는 어떨까 싶다.

가족을 돌보는 대상인 주부가 힘들면 가족들이 힘들어진다.

주부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을 좀더 안락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희망한다.



1. 사례 제시

“얘들아, 수학 선생님께서 점수 확인하고 잘못 나온 것 있으면 오늘 안으로 교무실로 오라сь!”

우르르 달려 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민주는 교실 뒤편에 서서 한참을 기다린다. 웅성거리며 기웃거리던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질 즈음, 민주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 점수를 확인하고 얼른 자리에 앉는다. 교실 저편에서 재민이의 아쉬움 섞인 탄성이 들린다.

“아, 다 맞은 줄 알았는데 하나 틀렸나봐!”

2. 문제 제기

1.1. 장소: 중·고등학교의 교실

1.2. 대상: 교사, 학생

1.3. 문제 분석: 개인의 시험 점수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이다. 중간·기말시험 등을 치른 후 학생들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 과목의 담당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반별로 출력하여 각 반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는 학생 개인의 성적이 온전히 학급 전체에 공개됨으로써,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십대 청소년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열등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단순히 학생의 학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개인의 자아 가치관 성립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 개인의 시험점수 공개는 엄연한 인권 침해이다.

3. 개선 방안

개인 성적의 공개 게시는 근절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개인 정보 중 하나인 성적이 인권의 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함을 지각할 필요가 있다. 타 학생들에게 개인의 성적이 공개되지 않게끔, 개별로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4. 예상되는 사회적 파급

본인(작성인)은 미국의 공립중학교에서 4개월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에 학생 개인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미국 학교의 사례에서, 본 문제점이 개선될 시 한국 교육 현장에의 파급 효과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학생 개인의 권익이 보호되며, 나아가 학교 생활문화가 변화하게 된다. 학생들이 서로의 학업 성적을 알지 못하므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여지가 감소한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수치화된 시험성적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학생들이 다방면에서 자신의 재능을 찾고 개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 이에, 학생을 개인 성적 공개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개인과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현상의 분석

우리나라의 대학은 그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여러 단과대학이 모여 있는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의 경우 단과대학들이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위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은 캠퍼스 내에 각 단과대학과 도서관 및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모여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 캠퍼스 내에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진입이 전혀 통제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캠퍼스 내로 진입한 차량의 속도나 운행형태를 통제할 인적, 물적 요소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통행과 주요동선이 집중되는 공간인 각 단과대 앞 마당은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차량의 접근이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빈번하다.

2. 사례 발굴 및 연구방법

필자는 경북대학교 법학부에 재학 중이다. 자동차로 인한 보행권의 위협뿐만 아니라,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누리기가 힘들었다. 주차된 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확 트인 공간을 찾기 어렵고 어디를 가나 차들이 시야를 막는다. 학생들이 소유한 차들도 그 비중이 상당하다. 학생이라면 아직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될 것이나, 학교에서 차의 진입 및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편리상 자신의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생들의 허위의식과, 편리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촉진한 것이나 다름없다.

보행권의 위협으로 인한 불편은 자칫 잘못할 경우 생명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경북대학교 및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살펴보고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 그 피해여부를 조사해보

았다. 아울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3. 문제제기

학교 내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학생들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 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자동차의 경적이 울리면 언제나 보행 중인 학생이 옆으로 비켜나야 한다. 대로만큼 넓은 이동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누군가는 비켜서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이동 동선과는 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도만으로 통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직선으로 이어지는 길에 인도를 만들어 놓은 것과 다름없어, 이쪽과 저쪽 교차로 이동해야 할 때는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오르막길, 내리막길에는 인도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행형태나 속도에 대한 제한도 없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는 학생들을 위협할 때가 많다. 대부분의 대학은 식사배달용 오토바이의 출입 또한 허용하는데, 그 특성상 매우 빠른 속도로 캠퍼스를 누빈다. 학생들에게 엄청난 위험이 아닐 수 없다.

소음과 공해도 문제이다. 교수나 학생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조용하며 쾌적한 환경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본연의 속성과 분위기를 점차로 상실해 가고 있다.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가장 잘 확보되어야 할 공간에서 오히려 인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4. 대구지역 세 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설문조사1-7 내용 박스로 묶음

대구지역의 세 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살펴 본 결과 거의 대동소이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들은 어느 학교에서나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그들의 의식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경북대학교 학생 75명

-2009년 9월 14일~16일 직접 설문을 요청하여 설문조사

영남대학교 학생 50명

-2009년 9월 17일 캠퍼스를 방문하여 직접 설문요청

계명대학교 학생 50명

-2009년 9월 18일 캠퍼스를 방문하여 직접 설문요청

◇ 설문1. 귀하는 평소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으로 인해 불편
이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3) 잘 모르겠다.

경북대학교- 있다 42명(56%)/ 없다12명(16%)/ 잘모르겠다 21명 (28%)

영남대학교- 있다 37명(74%)/ 없다 10명(20%)/ 잘모르겠다 3명(6%)

계명대학교- 있다 35명(70%)/ 없다 5명(10%)/ 잘모르겠다 10명(20%)

◇ 설문2. 있다면, 어떠한 불편이었는지 간략하게 써주십시오.

주요 답변만 모아 보았다.

- 차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했을 때,
- 걸어 다닐 때 차들 때문에 매연을 많이 마시게 됨.
- 학교 내 고시반에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심함. 밤에도.
- 학교 내에서 길 건너로 가는데 마치 무단횡단 하는 기분이 듦. 사실은 그렇게
통행해도 되는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잘못하는 것 같음.
- 건물 앞 벤치 주변에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어 답답하고, 환경도 쾌적하지 않음.

- 길을 다니면서 차들이 오면 비켜야 하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야 할 때,
여기가 도로도 아닌데 왜 이래야 하나 생각하게 됨.

그 밖에 기타의견

- 아직 학생인데도 대중교통이 아닌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학우를 보면 상
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다.

◇ 설문3.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인한 불편이 인권의 침해가 된다고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총 175명 중 123명이 없다고 대답 약70.3%

◇ 설문4. 학교 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제한해야한다.
- 2)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경북대- 제한해야한다 42명 (56%)/ 제한하지 말아야한다 33명 (44%)

영남대- 제한해야한다 23명 (46%)/ 제한하지 말아야한다 27명 (54%)

계명대- 제한해야한다 28명 (56%)/ 제한하지 말아야한다 22명 (44%)

◇ 설문5.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하신 경우 그 이유는?

주요 답변을 모아보았다.

- 일본의 히토즈바시 대학이란 곳에 간적이 있는데, 교수는 물론 학생도 교내로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다. 일본의 대부분 대학이 그러하다고 들었다. 그
래서 학교 내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다. 우리나라 학교는 마치 시내 변화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 학교에서 산책을 즐기다가도 차가 지나가면 매연 때문에 괴로웠다.
-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므로, 최대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환경이 훨씬 깨끗해지고, 조용해질 것 같다.
- 번잡한 분위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 설문6.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하신 경우 그 이유는?

주요 답변을 모아 보았다.

- 집이 먼 학생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
- 학교 내로 차를 못 들어온다는 것이니 타고 와서 학교 밖에 주차하면 되지만 그만큼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까?
- 요즘학생들도 차를 소유한 경우가 많은데 학교 내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하면, 차를 아예 이용하지 말라는 건가, 학교 말고는 가는 곳도 거의 없다.

◇ 설문7.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하신 경우, 셔틀버스의 운행 확대 및 대중교통수단의 노선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학교 내 차량 통행 제한에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까?

- 1)협조하겠다.
- 2)협조할 수 없다.

경북대- 협조하겠다 12명(약31.3%) / 협조할 수 없다 21명(약63.6%)

영남대- 협조하겠다 15명(약55.5%)/ 협조할 수 없다 12명(약44.4%)

계명대- 협조하겠다 12명(약54.5%)/ 협조할 수 없다 10명(약45.4%)

5. 설문의 한계 및 결과 분석

더 많은 수의 학생을 상대로 설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시간의 제약과

혼자서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제한된 학생들만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표본의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으나, 학생들의 의식을 살펴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우선,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인한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불편함과 피해가 인권의 침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체로 작은 생활의 이슈 정도라고 생각하였다. 즉 인권이 거대 담론으로 여겨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논의를 끌어내는 데는 다소 어색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인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이 인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상황은 여전히 개선될 필요가 충분하다고 본다.

피해를 겪은 경우의 사례는 대체로 비슷하여, 보행권의 제한 및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환경권의 침해가 주를 이루었다.

차량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서는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대체로 찬성하였으나, 그 정도가 과반수를 겨우 넘는 정도였고, 영남대의 경우는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것을 통제할 경우에 겪게 되는 불편함이 더 크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차를 소유한 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이에 찬성하지 않았다.

제한에 찬성한 학생들은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필자는 학교 내 다수의 차량이 학생들의 소유임에 주목하고, 이들이 개인의 차를 이용해 등교하는 것이 대중교통의 불편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수단의 노선확보가 이루어지면 개인차량의 사용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제도의 개선 후 차량 제한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경북대의



경우는 그래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쪽이 더 많았다.

학생들은 이미 그 편리함을 안 이상 그러한 편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무리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를 통한 등교가 수월해 저도 자신의 차로 등교하는 것만큼 편하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무엇보다도 의식의 개선이 가장 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래의 개선방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6. 개선방안

① 의식의 개선

분명히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인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그래야지만 중대한 인권적 문제도 방어할 수 있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권은 곧 거대담론이라는 인식이 공고하므로 그것이 우리 실생활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의 전환도 뒷받침 되어야한다. 따라서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은 물론이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며, 그 본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는 인식이 공고해져야 한다. 요즘은 대학이 그저 교육기관으로서의 이미지만 가질 뿐이고, 심지어 학생들조차도 스스로가 지성인으로 불리는 것을 어색해 한다. 대학의 교육을 받은 정도라면 지성인으로서의 인식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대학이 신성한 학문의 전당이라는 인식과 함께 학생들이 지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발전에도 중대한 문제이다.

학생들의 경우는 또 한 가지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허위의식에서 비롯된 개인차의 소유나 이용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장의 편리보다 공익의 증진을 위해 다소의 불편함을 감소할 수 있다는 의식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가. 지면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의식개선 운동

대구시 및 시민단체, 대학의 학생회가 협력하여 각 대학에 이러한 의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터넷 책자 등을 발행하여 학생 및 교직원 나아가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점진적인 차량제한 방안

지금껏 당연하게 행해져온 캠퍼스 내 차량통행을 일시에 완전 제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를 달성해나가서 그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학교의 구성원 스스로가 개선되어가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차량 요일제 및 소위 카풀의 활성화

일부 대학에서는 차량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엄격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소위 카풀이라 불리는 차량 동승제를 적극 권장하고, 적절한 인원수를 정한다. 예컨대 반드시 2인 이상이 동승한 학생차량의 진입만을 허용하는 등의 방침을 만드는 것도 좋다.

나. 셔틀버스의 운영확대 및 대중교통 노선 확보

각 대학은 모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근접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어서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셔틀버스 정류장으로 와야 하는 학생의 경우는 그 편리가 상당히 감소한다. 따라서 학교 예산 가운데 셔틀버스 운영예산을 확대하고 대구시 내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의 거주가 있는 지역은 셔틀버스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셔틀버스는 교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계명대는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지나며, 영남대의 경우도 대구시의 많은 버스가 종점으로 삼는 지점에 해당해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버스수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경북대의 경우는 근접한 곳에 지하철역이 지나지도 않으며, (가까운 신천역이 있으나 도보로 걸어 학교까지 오기엔 무리가 있고, 버스를 환승해야 함) 이용 가능한 버스노선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경북대도 도심 안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아주 불편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일부버스노선만이 학교 앞을 지나기 때문에 지하철과 버스 간, 버스와 버스간의 환승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등하교 시간 승객의 집중으로 그 불편이 더욱 가중된다.

따라서 각 대학 앞을 지나는 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하다면 기존 노선을 대상으로 학생 승객이 집중되는 시간에 운행하는 버스수를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다. 주차 공간 외의 차량 운행 금지

각 단과대 주변에는 차량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캠퍼스 내에서 차량이 운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주차공간을 만들고, 그 외 공간에서는 절대로 차량이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학교 캠퍼스 내 학교 출입문과 멀지 않은 곳에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를 주차공간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공간은 주차 및 차량의 운행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③ 궁극적 해결방안

궁극적 해결방안은 학교 내 차량의 운행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이 희생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 이익의 비교형량을 해보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몸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공익적이며 중대한 이익을 갖는다. 따라서 다소의 불편을 느끼더라도 학교 내 차량의 진입을 아예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은 분명하다. 외국의 경우 차량이 완전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학생과 교직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애초에 이러한 제한을 하지 않아 이제 와서 이러한 시도를 하려니 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대학 내 학생들을 보호하고, 대학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과 같이 마치 변화가를 연상케 하는 학교 분위기는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점진적인 방안들을 실천해 가면서, 중국적으로는 차량이 완전 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사회적 파급효과

① 새로운 영역의 인권문제 확인

그동안 대학 내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사회, 경제적인 요소와 관련된 것들이 쟁점이 되었다. 예컨대, 등록금, 취업문제와 같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중대한 문제임은 말할 것도 없으나, 또 다른 영역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소홀해 저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 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학생들의 보행권, 생명권, 환경권,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해보는 것만도 좋은 발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지역사회의 관점-교육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수도권 대학에 뒤지지 않는 교육 분위기와 경쟁력을 확보한다.

대학의 본질을 지키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어느 곳에서 보다 보호받고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이고, 우리 대학이 질적으로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교육의 도시라 불린다. 대구의 대학들이 다른 지역의 대학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전통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양질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학생과 우수연구진을 확보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적 기관들이 대구로 밀집되어 교육의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③ 국가적 차원에서



캠퍼스 내에서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은 비단 대구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우리 대학이 그만큼 학생들을 위한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캠퍼스 내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가장 편하고, 능률적으로 공부에 몰두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확보한다면 자연스럽게 연구 성과는 향상되고, 외국의 학생들과 연구진들도 한국 대학의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8. 결

학생들이 가장 보호받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캠퍼스가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해 위험하고 무질서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보행권의 침해는 인권의 핵심요소인 생명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조용히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도, 자동차의 매연 및 소음은 이를 불가하게 한다. 따라서 이것이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점진적인 개선방향들을 취해가서 궁극적으로는 캠퍼스 내 차량 통행을 완전히 제한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됨을 물론,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그 본질에 알맞은 환경을 갖출 수 있다.

단지 생활의 작은 이슈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그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다. 아무쪼록 이 창안서가 대학 내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문제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42 11번가 광고의 '살색' 발언

최희주

통신사 광고 잇단 구설수...

SKT 11번가 "살색이구만"

인권차별 소지로 수정 결정

"이게 무슨 핑크색이에요. 살색이구만."

기사참고:쿠키뉴스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는 최근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여성그룹 '2NE1'을 모델로 기용해 지난달 28일부터 전파를 타기 시작한 SKT의 온라인 쇼핑몰 '11번가(11st)' 광고다. 2NE1의 멤버(박봄·씨엘·공민지·산다라박)들이 각각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연기하는 이 광고에서 "이게 무슨 핑크색이에요. 살색이구만"이라는 대사가 나온다. 박봄이 연기한 이 부분은 막상 도착한 물건이 고르던 당시와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살색'은 이미 수년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용어다. 지난 2002년 아프리카 가나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살색은 특정한 색만이 피부색이라는 인식을 전달하며 황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색명을 정하는 기술표준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지난 2005년 5월 결국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꿨다. 과감한 선언인가"라고 꼬집었다.

해결방안: 먼저 11번가 광고의 책임자가 박봄의 살색부분만 살구색이라고 바꿔 다시 촬영한 후 방송을 보내야한다(이미 이 방법은 실행 되, 올바른 광고가 TV에서 방영되고 있음). 그리고 각 문구사들도 사인펜, 색연필, 크레파스에 살색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 부분을 살구색이라고 다시 표기해야 한다.

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한글 프로그램에도 살구색이라고 치면 틀렸다는 의



미의 빨간 줄이 쳐지니 이 또한 고쳐야한다. 학생들의 국어 교과서에도 살색은 인권침해 발언이니 사용하면 안 되고 살색이 아닌 살구색 이라는 말이 옳다고 가르쳐야한다.



43 우리에게 '이혼녀'란?

홍누리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면 소위 막장드라마라고 하여 불륜이나 이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드라마의 소개에서 주인공은 착하던 악하던, 젊던 늙었던 일단은 '이혼녀'라는 말로 등장한다.

여기서 '이혼녀'라는 말이 주는 어감은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을 한 여자라는 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이혼이 누구의 잘못이었든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혼녀'라고 낙인찍히고 그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혼녀'라는 단어는 소위 딱지라고 불리며 이혼여성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그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급증시키고 있다. 회사에서도 이혼녀라고 하면 이미 한 번 갔다 온 사람, 남자와의 관계에서 알 것 다 아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며 이혼여성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흔하고 또 앞에서는 안 그러지만 뒤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녀의 결혼생활을 들먹거리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여성들은 아직 이혼에 대한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주위 사람들의 따갑고도 차가운 시선에 한 번 더 상처받게 된다.

WPO·EAI·경향신문 국제인권익식조사 2008에서 조사한 미망인과 이혼여성의 차별이라는 주제에서 한국은 열 명 중 여덟 명이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 17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 때문에 나와 같은 나이의 세대들은 결혼해서 이혼하여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느니 결혼할 상대와 혼전 동거를 해보고 결혼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다.

이혼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가장 큰 일은 먼저 이혼녀에 대한 시각이다. '미혼녀'나 '결혼녀'라는 말은 자주 듣지 않아 생소하지만 '이혼녀'라는 말은 훨씬 익숙하게 다가온다. 왜 굳이 그녀를 이혼녀라 불려야 하는가? 그녀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해서 다시 결혼을 안 한 상태의 미혼으로 돌아온 것뿐이다.

난 '이혼녀' 라는 단어를 없애고 그녀들을 미혼의 여성들과 똑같이 미혼여성 혹은 콜드미스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녀들이 이혼을 한 것은 그녀들의 능력이나 성격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혼녀' 라는 단어로 그녀들을 묶어놓으려 하고 있다.

'살색' 이 인권차별적인 단어이듯, '장애인' 의 반대말이 '정상인' 인 것이 인권차별적인 단어이듯 '이혼녀' 라는 단어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개선된다면 나아가 그녀들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44 인터넷에서 과도하게 요구되는 주민등록번호 현황

I. 문제제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개인정보 범람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나에 대한 개인정보가 너무나도 쉽게 요구받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의 핵심적인 요소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웹 사이트도 제한된 이용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를 어느 곳에서도 요구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비해서 보호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개인정보는 수시로 유출의 위험에 놓여 있고 범죄를 비롯한 악용의 소지가 높아져 가고 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정보인권의 향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효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II. 주민등록번호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

1.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사진 1] 인터넷 포털 사이트 'DAUM'의 회원가입 절차



[사진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NAVER'의 회원가입 절차

위 [사진 1]과 [사진 2]에서처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메일, 카페,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메일, 카페, 블로그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광고, 음란성 정보 배포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회원가입 절차를 두고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스팸 메일이나 음란성 정보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를 통해서 상업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패턴과 개인정보에서 나타난 성별과 연령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광고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다. 약관에서 이에 대한 동의여부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와 그 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 명이라는 기준도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들고 설령 그 기준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너무 과

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2. 국가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생활 속에서 국가기관을 이용하는 일은 자주 발생한다.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사진 3]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절차

[사진 3]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물론 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의 기본적인 신원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 대 개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관계이기에 [사진 3]에서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함으로써 개인이 공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어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기관에서 무분별한 민원제기의 우려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업무처리부담은 시민들의 개인정보의 요구라는 행정 편의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스스로 부담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사진 4]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 직원 부조리신고 절차

[그림 4]에서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실명인증과 공공 I-PIN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공 I-PIN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요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적인 성격의 수단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I-PIN은 본인확인기관에 자기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에 I-PIN을 발급받도록 되어있다.

본인확인기관에 신원정보를 제공해야지 I-PIN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도 본인확인기관에 신원정보를 제공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인터넷상에서 굳이 개인에 대해서 식별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이다. 분명 개인정보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부분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정보인권이 공적·사적인 영역 등 전 영역에서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3. 사적인 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사진 5] SK Telecom 무료문자 서비스 정보 제공 동의 및 전남대학교 도서관자치위원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사적인 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주로 인터넷상에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사적인 공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불필요하다. 인터넷 뱅킹 등과 같은 부분에서는 개인정보의 식별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일반적인 커뮤니티 사이트나 단순한 정보제공 목적의 사이트를 비롯한 사적인 영역의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이라는 자유로운 공간속에서 더욱이 사적인 내용을 지향하는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진 5]에서처럼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상의 목적으로도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절차 속에서 약관을 통해 동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과 개인 사이도 평등한 관계가 아니며 수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고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사진 5]처럼 대학교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도서관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중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굳이 제공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외의 다른 식별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이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과도한 개인정보의 요구를 제한해야 한다.

III. 대안과 사회적 효용성

1. 대안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단순한 몇 가지의 정보로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곳곳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취합한다면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하였고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I-PIN과 같은 대체적인 수단이 도입되기도 하고 국가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과도히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

[사진 6] Gmail의 이메일 계정 만들기

[사진 6]은 Gmail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 중의 하나이다. [사진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주민등록번호외의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개인정보는 위의 이메일을 사용하는데 전혀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I-PIN과 같은 대체적인 수단으로 개인을 식별할 필요도 없다.

즉, 일부 핵심적인 공공기관과 금융관련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대체적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없다. 간단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면 된다. 너무나도 간단한 해결책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없다. 인터넷 공간의 자율성이 극대화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민주주의적 가치가 구현될 것이다. 물론 인터넷 공간의 역기능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지금처럼 개인정보 등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진 6]의 서비스는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용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인터넷의 장점은 자율성이다. 이러한 자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어디에서나 요구받아서는 안 되며 최소한의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본인의 실질적인 동의 속에 제공되어야 한다. 나머지 사적영역을 비롯한 인터넷 공간속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절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사회적 효용성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공간 속에서 충분히 보호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용성이 확보될 수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국가나 민간차원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했다. 하지만 많은 예산과 인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였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위임하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역에서 관리하는 것



이지 엄밀히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어느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다. 대체적인 수단으로 실시되고 있는 I-PIN도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면 손쉽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정보인권의 강화는 인터넷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한다던지 각종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인터넷에서 논의가 많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여 개인을 인터넷 공간 속에서도 식별되게 만든다면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위축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카페나 블로그에서도 사회적인 압력을 받음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인권이 침해되게 된다. 그렇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프라인 공간속에서 제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통의 공간이 확보되면서 실질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소통의 공간 속에서 개인의 진정한 인격도 발양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보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보인권이 보장되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 글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인권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며, 그 내용을 시민들께 제안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의 '생활 속의 인권 찾기 시민창안클럽' 회원들의 지혜를 모은 내용입니다. 시민창안클럽은 인권의 생활화, 지역화,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인 시민참여 모임입니다.

생활 속의 인권 찾기 시민창안클럽(<http://cafe.daum.net/humandg>)

“엄마 이 옷 어때요? 그럼 이 옷은?”

외출을 준비하던 아이가 이 옷 저 옷을 걸쳐보고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지 제게 의견을 물어옵니다. 어릴 적엔 엄마가 챙겨주던 옷만 입었는데 이제 스스로 자신의 옷을 챙겨 입을 만큼 자랐다는 게 기특하고 그 모습이 예뻐서 한 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아이와 저는 옷 입는 스타일이 너무나 다릅니다. 학생이니까 깔끔하게 입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아이는 겹쳐 입고 조금은 요란스러운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은근히 제 취향대로 밀고 나갔는데 옷 입을 때마다, 외출할 때 마다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잦았고 나의 이런 행동이 아이의 생각과 개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입혀주는 옷만 입는 것은 쇼윈도의 마네킹 인형놀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야, 물 좀 가져와! 설거지 좀 해!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해!”

아이들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부모인 나의 말투는 어떤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부모 입장에서서는 부탁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명령조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에 지금껏 그렇게 해오셨다면 내가 아이를 정말 존중했는지 한번쯤 되돌아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편물을 가지고와 무심결에 결봉을 뜯으려다 ‘아차’ 싶어 그만 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었거든요. “만약에 내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다른 누군가가 뜯어 봤다면 내 기분은 어땠을까?” 하는 물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식구들끼리 어때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나의 행동들이 어쩌면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물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지 신체적인 학대, 언어적인 학대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저의 고백은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하나의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인격, 자녀와의 세대차이, 자녀세대의 의식과 문화 등을 존중하지 않고 교육의 이름으로 자녀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부모님들의 행동, 이런 것만이라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부모님의 실천	
자녀의 사생활 존중하기	■ 자녀 일기장 몰래보지 않기 ■ 자녀 휴대전화 몰래보지 않기 ■ 자녀 책상, 가방 뒤지지 않기 ■ 자녀 우편물, 전자우편 몰래보지 않기
안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 긍정적이고 권유형의 표현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겠니?”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기 ‘야, 임마, 이 새끼’ 등 감정적 표현 사용하지 않기 ■ 자녀의 말 끊지 않기, 자녀의 의견과 선택의 권리 존중하기 ■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기

이 글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인권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며, 그 내용을 시민들께 제안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의 ‘생활 속의 인권 찾기 시민창안클럽’ 회원들의 지혜를 모은 내용들입니다. 시민창안클럽은 인권의 생활화, 지역화,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인 시민참여 모임입니다.

생활 속의 인권 찾기 시민창안클럽(<http://cafe.daum.net/humandg>)

인권이 최근 우리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입시위주의 교육체제·권위주의 문화·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참정권과 자치권의 제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학생의 인권이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마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각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 인간존재로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복지의 권리, 평등의 권리로 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인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인간 존엄의 가치와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을 보장할 권리, 아동의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 등으로 규범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물음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는 학생의 인권, 제자들의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굳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상의 학교생활에서 선생님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아니 실천해야만 하는 과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작은 실천, 인권의 소중한 싹을 틔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첫째, 학생들의 이름을 소중히 불러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야”, “20번”, “실장” 등의 호칭으로 호명된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나 별명 또는 상스러운 호칭으로 불러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했ند가요?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이름이외의 다른 용어로 불려집니다.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사랑을 담아 학생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다면 학생들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그것을 교사들에게 전해주지 않을까?

둘째, 교육적인 지도가 필요할 때에도 학생들의 인격에 대한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교무실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관리자나 학부모로부터 실수를 지적당한다면 어떨까요? 학생도 교사와 같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학생이 지각을 했을 경우, 학생들이 많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가 야단을 친다면 그 학생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낄 겁니다. 오히려 반항심이 생겨 교사의 지도내용은 안중에도 없을 지도 모릅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보이게 하는 본보기식 처벌이나 지도가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해당학생의 인권을 해치는 일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체적인 체벌보다는 감화, 감동을 주면 좋겠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께 손바닥을 맞고 너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아파서 선생님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나의 행동은 수정이 되었지만, 글썽요 어린 저에겐 그것보다 아프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결과보다는 과정, 수단보다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은 결과나 목적을 위해 과정을 무시하거나, 옳지 않은 수단을 선택한 적은 없을까요? 체벌과 관련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체벌이라는 행위자체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점에는 누구나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체벌이나 비합리적인 단체기합보다는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학교의 여건에 맞게 찾아보는 것이 교육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평등하게 학생들을 대했으면 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외모에 따라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었던가요? 「내일 청소년 생활 문화 마당」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주로 누구에 의해 차별을 받는가? 란 질문에 많은 학생이 ‘선생님’ 이라고 답했으며, 주로 성적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성적순으로 교실 내 자리를 배치하고, 성적순으로 자습실을 이용할 수 있고, 성적이 높아야 반장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의 수월성 차원의 차별이 아니라 교사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학교를 ‘작은 사회’ 라고들 말합니다. 이 말은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 성원으로 제 몫을 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체험하고 배우는 곳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작은 사회’ 인 학교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박탈당한 채 통제의 대상으로만 전락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미래 사회’ 를 한번 떠올려봅니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들이 최대한 보장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인간

답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사회를 스케치해 나갈 주인공들인 학생들의 기억 속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선생님의 실천	
학생의 이름 소중히 불러주기	■ 번호, 별명, 상스러운 호칭은 Oh~ No
학생의 인격 존중하기	■ 교실 내에서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 훈계하지 않기 ■ 교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벌하지 않기 (예) 지각했다고 교문 앞에서 무릎 꿇리지 않기 ■ 과도한 단체기합, 체벌 등 하지 않기
차별하지 않기	■ 타 학생과 비교하지 않기 ■ 개인적 편견과 감정에 치우쳐서 학생 대하지 않기 ■ 성적, 용모, 생활환경 등으로 차별하지 않기

47 왜 '여자고등학교'인가?

김수정 (생활속의 인권찾기 시민창안클럽 회원)

이 글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인권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며, 그 내용을 시민들께 제안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의 '생활 속의 인권 찾기 시민창안클럽' 회원들의 지혜를 모은 내용들입니다. 시민창안클럽은 인권의 생활화, 지역화,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인 시민참여 모임입니다.

생활 속의 인권 찾기 시민창안클럽(<http://cafe.daum.net/humandg>)

한 분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OO고등학교이고, 남녀공학인 학교도 OO고등학교인데 왜 유독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OO 여자고등학교 ‘라고 부르는가요?’” 라고. 순간 빈혈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써왔던 표현이 불합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별로 학교명칭을 왜 구분했을까?, 왜 ‘여자고등학교’에 성별 표기를 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명칭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일 거야’, ‘남자 고등학교가 먼저 생겼으니 뒤에 생긴 여자 학교에 성별표기를 했겠지’와 같은. 몇몇의 추측이 제 고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여자고등학교’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리저리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지역 최초의 여자학교는 ‘신명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1907년 미국 선교사 부부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신명여고의 전신입니다.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지금의 경북고등학교는 1916년 대구고등보통학교에서 시작하여 1925년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로 개칭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북여자고등학교는 1926년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개교하여 오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구여고는 1954년에 개교하였고, 대구고등학교는

1958년에 개교하였습니다. 두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여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여학교가 뒤늦게 설립되었기 때문에 ‘여자고등학교’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럼 무엇인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여자’라는 성별을 표현했던 말인가? 과연 그럴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화학당, 신명학교 등 근대 여성전문교육기관의 어디에도 ‘여자’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몇몇 공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명칭이 중복되는 경우도 실제 흔치는 않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 당시부터 중복되는 명칭을 의식적으로 피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아가 명칭이 중복된다면 설립 당시 중복을 피하거나 아니면 개칭을 하면 될 일이기도 합니다. 굳이 ‘여자’라는 성별표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언어 그리고 표현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여자’라는 성별표기를 한 것 또한 명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편의적 구분이기 보다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여자고등학교’라는 표현은 뒤집어 보면 ‘남자’고등학교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소수 똑똑한 신세대 여성들의 전문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남자’고등학교와 같이 조국 근대화의 역군, 산업역군, 한 가족 혹은 한 가문의 생계와 부흥을 책임져야만 하는 존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인식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다시 질문을 던져 봅니다. “굳이 ‘여자고등학교’라고 불러야하나?,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정말 문제가 있다면 남녀공학은 OO남녀고등학교라고 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OO혼성고등학교라고 하던지.” ...

이제 글을 맺을까 합니다. ‘여자고등학교’라는 표현이 여성에게 구체적으로 어

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의문과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자고등학교’라고 지칭하게 된 배경에 혹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우리사회에 공고히 남아있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함께 성찰해봤으면 하는 바람, 나아가 우리사회가 지니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의식과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따름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물음을 던져봅니다. 왜 ‘여자 고등학교’ 일까요?



이 글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인권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며, 그 내용을 시민들께 제안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의 '생활 속의 인권 찾기 시민창안클럽' 회원들의 지혜를 모은 내용들입니다. 시민창안클럽은 인권의 생활화, 지역화,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인 시민참여 모임입니다.

생활 속의 인권 찾기 시민창안클럽(<http://cafe.daum.net/humandg>)

오늘도 변함없이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승차위치를 알려주는 한 곳에서 '노약자·장애인 보호석'의 위치를 나타내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지팡이를 든 노인'의 형상을 디자인한 표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하철에 올라 한구석에 붙어있는 '노약자·장애인 보호석'이라는 문구를 또다시 확인합니다. 그 옆자리에는 '교통약자 배려석'이라는 표식도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일까?', 그 문구를 직접 접한 노인과 장애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냥 배려석이라고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굳이 '교통약자 배려석'이라고 표시해야 할까? 노약자, 장애인, 교통약자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 등. 많은 의문을 안고 지하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쪽으로 걸어왔는데 또다시 익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승강기 왼편 상단에 커다랗게 붙어있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표시, 그리고 출입구 상단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우선'이라는 문구. '꼭 이래야만 하나?' 하는 답답한 물음만이 쏟아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호,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는 바람은 이왕 배려할 것이라면, 그리고 진정으로 배려한다면 좀 더 그들의 입장에

서 서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노약자·장애인 보호석’을 설치한 것일까요? 자신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 버린 노약자와 장애인의 기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노약자와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는 것은 그들이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조금의 불편함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와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신의 앞가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장애인 보호석’은 정확한 표현도 아니고 그들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표현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비노약자와 비장애인에게 할 일을 다 했다는 위안을 주는 표현일 따름입니다.

‘교통약자 배려석’의 경우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리를 배려한다는 것 자체가 교통약자를 상대로 하는 행위입니다. 건장하게 보이는 청년일지라도 요청을 한다면 배려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수 있기에 누구나 배려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굳이 ‘교통약자 배려석’이라고 해서 그 자리를 배려 받은 사람 혹은 앉아서 가고 있는 사람이 교통약자인 것처럼 인식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배려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약자·장애인 보호석’과 ‘교통약자 배려석’을 없애고 좀 더 인권적인 표현과 표식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냥 ‘배려석’이라고 해도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독일과 같이 ‘요청이 있으면 양보합시다’ 정도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보호와 배려를 받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들에게 불필요한 불편함을 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노약자와 장애인 표식 또한 개선했으면 합니다. 가장 알기 쉬운 디자인을 채택한 것이겠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배려한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노골적인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진정한 배려의 마음을 담은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관해서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노약자·장애인 보호석’, ‘교통약자 배려석’, ‘노약자와 장애인 표식’ 등의 개선

과 관련해서 시민공모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훨씬 더 인권친화적인, 진정한 배려의 마음을 담은 지하철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하철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가지게 된 위와 같은 의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소중한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나의 배려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닌가?’, ‘나의 배려가 진정으로 상대의 입장에 선 배려인가?’, ‘나는 그들과 다른 존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아닌가?’ 등등.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소중한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입니다. 지하철로 대부분 이동을 하고 매일 출·퇴근 역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지하철이 이동하는데 나를 편리하지만 딱 한 가지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함에 있어 이 딱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혼자 할 수 없어 매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저 스스로 지하철 승차권(우대권)을 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일률적으로 모든 지하철 역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 버튼이 높아 스스로 승차권을 뽑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역무원을 찾아서 부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매일 겪고 있죠. 그런데 가끔 역내에 역무원이 보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시간에 쫓기게 되면 본의 아니게 무임승차를 하게 됩니다. 혹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우리말로 '보편적 디자인'이라 하는데, 신체적인 약함뿐 아니라 상황이나 나이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의 불리한 점을 보완하는 디자인계에서 최근 각광받는 개념입니다. 만일 대구지하철 승차권 발매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했다면 키작은 아이나 저 같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언제든지 스스로 승차권을 뽑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제가 스스로 승차권을 뽑을 수 없다는 불편보다 더 큰 불편은 승차권을 뽑기 위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서 부탁을 해야 한다는 거...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네야 하는 용기(?), 그리고 그 순간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는 걱정 아닌 걱정...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게 그리 유쾌하지 않음을... 그냥 나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텐데 괜한 고생(?)을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지하철 얘기를 좀 더 하면, 지하철 개찰구에 승차권을 찍을 때 개찰구 기계 왼쪽 편에 파란 불이 들어오는걸 보셨을 겁니다. 일반 승차권 이용객은 파란불이 들어 오지만 우대권(노약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이용객은 파란불이 아닌 빨간 불이 들

어웁니다. 이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하철 개찰구 모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빛색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우대권 이용객 중 우대권 이용 대상이 아닌 이용객을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몇년전 00광역시 지하철역에서는 우대권 이용객이 개찰구를 통과하면 '우대권 이용승객입니다'는 멘트가 나와 우대권 이용객에게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우대권을 찍는 순간 지하철 역내에 '우대권 이용승객입니다'라는 멘트가 쩌렁쩌렁 울리고 지하철 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일순간 그 사람을 응시 할겁니다. 순간 당사자는 얼마나 난감하고 어색하고 부끄러울까요?

단순히 불법 우대권 이용객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면 정당한 우대권 이용객의 인권을 생각하며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을 우대권 이용객과 비우대권 이용객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구별하고 분리하는 게 과연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지하철을 이용하며 엘리베이터 앞의 '장애인,노약자,임산부 우선', 그리고 지하철 열차 내의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배려석'라는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구를 보며 매번 드는 생각은 '장애인 배려석', '엘리베이터에 장애인 우선' 등의 문구가 없으면 우리 사회가, 우리 대구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에게 배려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 문구가 사람들에게 배려를 강제를 조장하여 각자 스스로 배려를 표하는 마음이나 행동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표현에 있어 장애인은 무조건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과한 배려와 친절이 상대방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건 아닐지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권이 굉장히 어렵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지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인권의 핵심은 힘없고 억압받는 타자의 입장에서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바뀌어나가는 것!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지하철을 바라보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되게 시설과 문화를 바꿔 가면 어떨까요?

